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1996. 11. 29

民族統一研究院

목 차

기 조 연 설	이병용(민족통일연구원 원장)	1
I. 회 의		6
■ 제1회의 : 4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1.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6
Selig S. Harrison(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2.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		30
김경일(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부소장)		
■ 제2회의 : 4자회담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1.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57
Hajime Izumi(시즈오카대학교 교수)		
2.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85
김창진(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박사)		
■ 제3회의 : 4자회담과 통일 전망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103
최영관(전남대학교 교수)		
2.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124
김국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II. 종 합 토 론		152
<부록> 회의일정		171

기 조 연 설

- 4者會談과 韓半島 統一 展望 -

오늘 사계의 전문가와 內外貴賓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족통일연구원과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가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國際 學術會議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및 소련의 붕괴는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동서진영간의 冷戰體制를 종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냉전시대의 兩極體制를 지역적 下位體制들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의 하위체제는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적·제도적 상호연결로 인하여 서구를 중심으로 국가간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안정된 多極體制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동북아지역의 하위체제는 역내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체제와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 및 강한 民族主義 등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과도기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동북아정세는 域內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 심화라는 協力的 側面과 중·일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등의 對立的 側面이 혼재하는 특징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 4월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고조 등 동북아 정세의 不確實性에 대처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안보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新安保共同宣言을 발표하고 양국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으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유럽에서 NATO의 膨脹追求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이해를 위협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신안보동맹에 대응하여 戰略的 同伴者關係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결과 냉전종식 이후의 한반도 주변환경은 평화가 정착되기 보다는 미·일 신안보체제와 중·러간 戰略的 同伴者關係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對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對立構圖가 구체화되는 경우, 이는 주변 4국의 군비경쟁과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韓半島에서는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거부함에 따라서 남북한간에 냉전시대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常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의 남북대화 착수 규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사업을 지원하게 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 한국정부에 의한 15만톤 쌀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의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종래 미국에 대한 적대적 비난을 한국으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작년에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대표 철수,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측대표 철수, 그리고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 소환 등을 통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금년에는 중무장 병력을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투입하는 軍事挑發을 계속하는 등 대남 武力示威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시간문제'라면서 戰爭危機論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시위 및 전쟁위기 발언은

첫째, 정전협정의 무력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 내지는 잠정협정 체결의 當爲性을 선전하고,

둘째, 대북 연착륙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緩和시키려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냄과 동시에,

셋째, 김일성 사망 이후 만연되고 있는 일반주민들과 당·정 간부들의 思想弛緩을 방지하고 體制維持를 위한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을 除外시키고 있는 반면, 4자회담 제안은 4국 모두를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서방선진 7개국 정상들은 지난 6월 프랑스 리옹 정상회담 폐막시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4자회담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의된 4자회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4자회담 제안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직시한 새로운 평화구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4자회담은 일단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緊張局面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對話의 場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한·미관계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韓·美 共助體制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한관계의 냉전적 구도를 청산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남북한 간에는 평화공존과 공영이 가능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는 배치되는 4자회담 제의를 가까운 시일내에 수락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 이외의 代案이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4자회담의 주요한 의미를 감안할 때, 오늘 민족통일연구원과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가 함께 사계의 專門家 여러분들을 모시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討議結果가 4자회담의 실현을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1. 29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Selig S. Harrison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목 차 >

- I. 개 관
- II. 경제정상화(Economic Normalization) : 중점 이슈
- III. 휴전협정의 대체
- IV. 군비통제와 평화유지

미국과 북한의 핵동결 협상이 절정에 달했던 1994년 10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 발행인에게 북한 공산정권은 “정권 자체가 붕괴될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핵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양보는 이러한 “북한의 운명을 연장해 줄 것”¹⁾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는 발언이 남한과 미국에서 되풀이되었다. 전 국방 장관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는 “아마 핵

1) James Sterngold, South Korean President Lashes Out at US, The New York Times, October 8, 1994, P.3.

동결 합의와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것은 지난 40동안 그 어느 때보다 붕괴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북한을 도와주려 한다”²⁾고 썼다. 당시 상원 원내총무였던 밥 돌(Bob Dole)은 와인버거(Weinberger)의 주장에 근거하여 핵동결에 반대했다.³⁾ 북한이 국제적 식량원조를 요청한 뒤인 1996년 4월 유엔군 사령관 게리 럭(Gary E. Luck)장군은 하원에서, “문제는 이 나라의 붕괴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가 붕괴될 것이며 언제 붕괴될 것인가이다”⁴⁾라고 증언했다. 그 직후 합참의장 존 샬리카쉬빌리(John Shalikashvili)장군도 “우리는 지금 북한을 주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시점에 있다”⁵⁾고 게리 럭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

클린턴(Bill Clinton)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붕괴에 대한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의 대한 정책 기조가 변할 것 같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미 행정부 내에도 이견의 골이 깊다. 더우기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내에는, 1994년 핵동결 합의시의 양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받을 경우 붕괴가 촉진될 수 있었던 북한의 운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1996년 9월, 북한의 무모한 잠수함 첩보활동 이전에도 정책 변화에 대한 의회의 반대로 인해 제재

2) Csapar W. Weinberger, The Appeasement of North Korea, Forbes Magazine, November 21, 1994, P.35.

3) Federal News Service, January 21, 1994, remarks before the winter meeting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in Washington.

4)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March 28, 1996

5) General Shalikashvili made this statement at a luncheon with editors of the Washington Post, April 1, 1996.

완화, 제한적인 식량원조 및 북한과의 협상에서 남한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행정부 관리들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결정 마비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에 북한을 참여케 하려는 남한과 미국의 노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4자간 평화진척에 관한 3자회담 및 이후의 4자회담에 참여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일련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 잠수함 첩보사건 이전에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는 보장 조치(token step)를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은 4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제재철회 조치를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정책 결정 마비로 인해 국무부는 4자 회담 의제나 회담에 채택될 미국의 입장에 관한 세부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I. 개 관

장래 미국의 대한 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쟁은, 북한은 정말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가 또는 여전히 살아남아 중국의 경우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인가라는 두가지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는 바람직한가? 그리고 “연착륙(soft landing)”, 즉 어느 일방에 의해 흡수되지 않는

느슨한 연합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과정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인가?

뒤따른 제안들은 미국과 남한이 추진하는 정책이 북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착륙”을 추진하는 미국과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일성에게서 세습된 북한의 정치체제는 몰락한 동구의 공산주의체제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신에 의해 강화된 견고한 전체주의 체제이다.

북한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남한, 일본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 감소에 따라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을 악화시킬 진부한 냉전정책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붕괴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의 불안정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37,000명의 미군도 참전하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대량 난민 유입사태나 시민 항쟁(civil strife)을 포함하는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인 완전히 붕괴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날 경우, 흡수 통일 시나리오상의 경제적 재건비용은 어마어마하여 독일의 재건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⁶⁾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소련 및 중국-북한간의 군사동맹에 대응한 미국-남한 군사동맹관계에 종속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미 동맹의 초기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은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6) Marc Fisher, Germany Groans Under the Huge Cost of Unification, Washington Post, July 2, 1991, p.4. See also Seoul Estimates Unification Cost, New York Times, Jan. 31, 1993, p.6.

유대를 러시아, 중국과 맺고 있다. 러시아는 조러 안보조약의 군사작전 조항을 무효화시킨 반면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안보약속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이완시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의 지원에 대한 희망을 점차 상실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남한과 동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안보조약상의 자국의 군사적 의무를 존중할 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대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다. 따라서 미국은 남한에서 군부의 지배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익 분자들(right wing elements)에게 불모 신세가 되었다. 극우 분자들은 북한의 조속한 붕괴와 흡수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더욱 더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접근은 경제적 제재 및 다른 형태의 압력조치들을 유지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무력화시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없이 남한의 요구 조건에 따라 통일되도록 강제-“억제된 붕괴(contained collapse)”-하려는 미국과 남한의 정책들을 선호한다. 이 두가지 접근방법 모두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가 보기에 미국이 지지할 경우 유력해 질, 느슨한 연합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 두가지 접근 방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제안(recommendation)의 핵심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철군함으로써 북한과의 화해를 가장 잘 진척시킬 수 있으며, 1953년의 정전체제를 남북한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새로운 평화유지 체제로 대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10년 안에 철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러한 체제의 일부가 되

어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이 군사력의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해 협상하도록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압력을 넣어야 한다. 상호 감군은 북한이 자원과 노동력을 군사적인 목적에서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전화할 수 있게 하는 “연착륙” 정책 성공의 실마리중의 하나이다.

5년 내지 10년의 이행기 동안 미국은 남한 주둔 육해공군의 감축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남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지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긴장이 감소되든 감소되지 않든 정해진 이행기가 끝날 때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을 통고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군사동맹을 폐지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남한과의 안보조약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의 동맹은 군사적인 영역에 제한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장기적인 이익을 남한과 공유하더라도 남한과 미국간의 단기적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인 판단을 행할 것임을 차제에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은 군비통제합의의 일부인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핵동결협약의 유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적이고 정연한 통일과정에 대한 지원, 한국민과 우호적인 관계수립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II. 경제 정상화(Economic Normalization): 중점 이슈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 철회는 북한이 경제난, 특히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추구하는 서방 및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 자유화/개방의 전제조건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완료할 경우 미국이 제재조치들을 해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3조 제1항에는 “이 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측은 통신 서비스 및 금융거래 제한을 포함하는 교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하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조항은 무조건적이며 다른 쟁점 사항들의 이행여부와 연계되지 않는다. 반면 제2항에는 “영사 및 다른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조건이 정해져 있고, 제3항에는 “양측의 관심사가 진전”됨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역 및 투자 장벽의 완화 방법 및 시기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벽 완화 약속은 규정되지 않았다.⁷⁾

1995년 북한 지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회의, 다섯번째 평양 방문,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과 최근 접촉에서 나는 공식적인 북한의 선전용 프로젝트보다는 제재 문제를 더 명확히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이 핵동결 합의하에 약속한 가장 중요한 이득들을 북한을 속여 빼앗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직 북한이 합의를 깨뜨릴 우려는 심각하지 않지만 내가 만난⁸⁾ 북한 지도자들은 핵

7)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Arms Control Reporter, January, 1995.

동결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는 협상 상대방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핵개발 계획을 동결했으며, 이는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단과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됐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특히 경제적 우호관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핵주권(nuclear independence)을 이미 포기했는데, 미국은 교역 및 투자 장벽의 상징적인 완화조치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재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북한의 불만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 7월까지 제2조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마그네사이트 단 한 상품에 대해서만 제재를 철회했으며, AT & T 사에 전화 및 팩스통신을 개설하도록 허가했을 뿐이다. 북한을 방문하여 투자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거의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제2조의 “금융거래” 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유 1400만달러의 경화는 미국 은행에 봉쇄된 채로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제2조에 자유화의 정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변명한다. 사실 1994년 10월 24일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할 미국 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허용하여 3개월 내에 제재문제를 과감히 진전시키려 했었다. 제너럴 모터츠(GM) 및 북한과 거래할 미국 회

8) 예를 들면,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김영남 외교부장 For example,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Kim Young Nam; First Deputy Foreign Minister Kang Sok Ju, and Lt. Gen. Ri Chan Bok,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t Panmunjom.

사의 해외 자회사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도 못돼 예상밖으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행정부는 제재를 해제할 경우 핵동결 합의 전체에 대한 반대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지 모른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행정부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남기려 하면서 핵동결 합의에 규정된 내용을 빈번히 부정확하게 말해 왔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부 관리는 “핵동결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들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더 완화할 것이다”⁹⁾라고 부정확하게 말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는 제2조에 따른 양보로 스탠턴(Stanton) 그룹이 정유공장을 보수하도록 승인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투자는 합의에 약속된 대로 핵시설을 비핵시설로 교체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제1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되었다.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자유화하고 국제적 신용을 얻으려는 상황에서 냉전시기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취해진 제재조치의 존속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나진-선봉 지역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년간의 세금면제 및 14퍼센트 세금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비자없

9) Stephanie Eshelman, Problems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U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Gaston Sigu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pril 22, 1996, P.5.

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1996년 4월 제재정책의 철회를 재촉하면서 대외 경제협력 위원장 김종우는 “오늘날 세계시장은 자본주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었다”고 인정했다.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은 “완전한 외국인 소유기업뿐 아니라 광범위한 납입자본(equity)과 합자회사(joint venture)를 포함해 현재 국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형태의 전면 도입에 착수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우리 민족 경제에 시급히 요구되는 고급기술과 외국 자본 투자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원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신용도의 근원이 된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으며, 무엇보다 현물 및 현금담보를 늘릴 대비가 되어 있다.”¹⁰⁾고 말했다.

제재정책 외에 미국은 냉전 시기 수출 통제 체제, 즉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을 겨냥한 약 30개의 새로운 다국간 그룹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5년에 체결된 독일의 도시 이름을 딴 “바젠나르(Wassenaar)협정”은 “적성국가(rouge state)”에 대한 재래식 무기 및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이중기술(dual use technology)의 수출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강대국간의 군비경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이니셔티브는 재래식 무기 판매의 급증이라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보편적이며, 무차별적인 제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접근방법이 남북한 양자에 대한 무기 판매를 억제

10) Kim Jong U, Some Issues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Policy,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Prosp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sponsored by the Gaston Sigur Cente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pril 22, 1996, pp.3, 4, 6.

하기 위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바젠나르협정을 적용할 때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dual use technology)을 북한에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경제제재를 해제하려는 미국의 쌍무적인 조치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직접 무력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을 봉쇄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군사적 이용 목적을 지니지 않은 교역 및 투자는 허용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북한이 식량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은 모든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연착륙”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확신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이 행한 후원자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북한을 보조하려 해서는 안된다. 다른 한편 탈냉전의 현실에 적응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이익을 위해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협력을 위해 가장 유망한 분야는 미국 정부가 아직 개발이 안된 북한의 금, 철, 망간, 아연 및 다른 광물자원의 민간부문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쌍무적인 경제원조를 확대해서는 안되며 미국보다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더 큰 일본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1965년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서 일본은 6억달러의 ‘배상금’ 혹은 ‘경제협력’기금을 지불하였다. 1994년 말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비교 금액(comparable sum)은 37억 6천만 달러에 이르지만 북한 대변인은 50억 내지 100억불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¹¹⁾

무엇보다도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주재 영구대표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원조기관인 유엔개발계획을 원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다국적 원조를 지지해야 한다. 미국이 지원할 경우 북한의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기구 가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유엔의 대북 식량원조 호소에 관대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III. 휴전협정의 대체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된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의 대한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한 변화는 43년간 지속된 휴전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남한이 4자 평화회담(미국, 남한, 북한, 중국)을 공동으로 제안할 때 이미 파악된 문제이다. 북한은 예상대로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핵동결 합의 제2조를 승낙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미국이 남한과 함께 제안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북한은 4자회담이 남북한간의 쌍무적인 평화협정을 맺도록 미국과 남한이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유엔사령부, 중국, 북한과 함께 휴전 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 남북한만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조

11) Ri Jong Hyok, Vice-chairman,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 said nothing less than \$10 billion would be equitable in addressing a Carnegie Endowment seminar in Washington on May 1, 1996.

약이라는 환상을 밀고 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미국은 남한을 배제하는 쌍무적인 평화조약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사이의 문제이며, 남북한이 쌍무조약을 체결하고 1991년 12월에 맺은 남북합의를 존중하면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1991년에 맺은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협정이 뒤따라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북한간의 쌍무적인 평화협정이나 남북한간의 쌍무적 평화협정이 아니라 북한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평화 기제”, “새로운 평화체제” 또는 “새로운 평화협정”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데 미국이 참여하는 3자간 교섭의 양상에 달려 있다. 1995년 5월 12일 북한 외교부는 성명에서 “휴전 체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동결 합의에 따른 관계정상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미군의 남한 주둔, 한미상호안보조약, 전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평화협정”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북한은 올바르게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러한 협정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5년 5월 성명에서 북한은 “새로운 평화협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미국과의 쌍무조약에 대한 언급은 회피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성명에서 “휴전 협정을 평화 기제로 대체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관계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재확인했

다.

1996년 방북시 나는 “새로운 평화기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권위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외교부 관리들은 공식적인 평화조약의 체결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일본이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휴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를 핵동결 합의에 따른 우호관계에 부합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판문점 주둔 북한 인민군 대표인 이찬복 중장과 4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이중궤도(two-track)의 평화유지 기구를 제안했다. 우선 미군과 북한군은 가칭 상호안보위원회를 창설한다. 이 위원회는 군장교들로만 구성되며 정부대표성이 없다. 이 위원회를 만든 후 곧바로 1992년 협정된 남북 합동군사위원회가 북미 위원회와 동시에 임무를 개시한다. 두 기구를 동시에 창설할 것을 제안했을 때 내 의견은 무시됐지만 이후 북한 대변인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미국 입장에 동의했다.¹²⁾

양 위원회의 기능은 평화를 위협하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돌발사태를 방지하고 군비통제와 신뢰구축 협정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의 일부로서 미-북한 실체라는 생각은 미국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당분간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침략에서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명목상 남한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제안된 기구는 미국의 역할을

12) Ibid.

넓힐 것이다. 미국은 남북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한반도 전체의 안전장치 또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휴전은 적대적인 두 당사자간에 체결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새로운 평화기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제는 남북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평화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내게 말한 북한 외교부장 강석주의 표현이다. 이찬복 중장은 휴전협정 및 유엔사령부가 대체될 경우 북한은 미군의 남한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미국은 새로운 평화기제의 창설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상 가까운 장래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미군이 철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이 한반도에 무기한(indefinitely) 주둔할 것이라는 상호 이해에 근거한 새로운 평화기제를 창설하고자 한다.

내가 만난 북한의 핵심 관리는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다. 우리는 역내의 세력균형 차원에서 미군 철수의 충격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비공식적으로(off the record) 말했다. 다른 관리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일본이 즉시 재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는 휴전협정의 대체 방안에 관한 몇 가지 특별한 제안사항들을 가지고 북한에 갔다. 나는 먼저 38선에서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미국이 미군 주둔의 근거인 유엔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는 공격력을 상호 후퇴시키거나 적

어도 공격력을 현저히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 군사위원회(North-South Military Commission)는 북미위원회와 동시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양 기구는 전체적인 삼각 구도 안에서 긴밀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위원회는 미국이 남한만을 옹호할 수 없으므로 남북한에 국한된 모든 군사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새로운 기구의 형태에 대해 타협하려 할 것이며 군비 통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이찬복 중장은 답변했다. 우선 북한과 미국의 장성들이 이 문제들을 논의해야 했지만, 미국은 그와 같은 회담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1995년 2월 북한 영토로 넘어간 헬기 조종사 생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접촉을 시작했다. 장성급 접촉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인 1995년 9월 남한의 항의로 중지될 때까지 14차례의 영관급 회의가 있었다.¹³⁾

남한은 미북간에 휴전협정 대체 회담이 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남한은 장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해야 할 역할을 남과 북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장래의 평화유지 기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다. 첫째는 거대한 이웃 나라가 한반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한 주둔 미군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상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찬복 중장이 시도한 미국 역할 중립화방안과 마찬가지로 이유

13) Interviews with General Ri Chan Bok, September 28, 1995, and officials of the UN Command in Seoul, October 1, 1995.

로 남한이 중국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든 않든 남북 합동 군사위원회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미군의 참가를 포함한 이행기의 평화유지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복무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기구를 이용하여 남한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남한을 포함한 3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중궤도(two-track)의 구조에 관해 이찬복 중장이 제안한 것들을 포괄하는 타협을 시도해야만 한다. 동시에 미국은 남북한이 상호 군사력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해 협상하는 동안 미군이 5년 내지 길어야 10년 이상은 남한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밴도우(Doug Bandow)는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안보조약의 4년내 종결을 요구한 자신의 책 「Tripwire」¹⁴⁾에서 긴장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구상하지 않았다. 반면 나의 접근방식은 미국이 남북한의 문제를 다룰 때 더 균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새로운 평화유지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안보조약의 종결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중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밴도우가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한 점은 미군 및 미군 기지가 표상하는 경제 지원, 그리고 최초 몇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원조

14) Doug Bandow, Tripwire: Korea and US Policy in a Changed World, Cato Institute, Washington, June, 1996.

를 받는 남한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밴도우가 지적했듯이 현재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주둔비용은 연간 30억불에 불과하지만 적정 규모의 부대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105억 달러에서 127억달러 이상 들어 간다. 더욱이 총비용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6억불 이상이 추가될 한반도 갈등의 해소를 위한 태평양 지역 미군 부대의 유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소수 중상층은 현상유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완충장치로서 미국이 남한에 계속 주둔하는 한 남한은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상호 감군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한은 방위비를 증강하게 될 것이고 미군 철수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경향은 최근의 남북 대화에서 남한의 접근 자세를 보면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상호 감군조치를 강구하기는 커녕 남한은 방위예산 및 군산복합체를 팽창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철군을 완료하기 전에 긴장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결국 철수를 충분히 예고하고 진지한 중재 노력을 한 후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보다 무기한 주둔할 경우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미군이 없을 경우야 비로소 남한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느슨한

연합이나 상이한 체제간의 공존에 기초해 북한과 화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탈냉전의 현실에 처할 것이다.

IV. 군비통제와 평화유지

휴전 협정을 새로운 평화유지 기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 말기에 존재했던 북미간의 적대관계에서 기원하는 주한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요구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유엔의 개입을 최우선적으로 초래하게 될 긴장 완화의 진전을 위해 유엔 사령부 해체에 조건을 달 것이다.

원로 외교관 제임스 굿비(James Goodby)와 공군 대령으로서 이전에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국방대학원에서 간행한 「Strategic Forum」을 저술했던 윌리엄 드레넨(William Drennan)은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재래식 무기 통제와 신뢰 구축수단들의 결합을 제안했다.¹⁵⁾

굿비와 드레넨은 “남북한 모두가 상대방 영토에 깊숙히 침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개념인 ‘비공격적 방위’ 원칙에 기초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제안했다. 오판에 의한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안한 조치들 중 북한군의 감량, 남북한 군인수의 축소, 군장비 형태 및 수준의 축소, 배치 양상의 변화 및 이에 상응하는 미군 감축을 포함하여 “비무

15) Koreapolitik, Strategic Forum, May, 1995.

장 지대 근처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보다 투명하다.

굿비와 드레난은 “이러한 협정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적 협정들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것이다”라고 썼다.

조심스럽게 표현된 이러한 제안들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것들이 1989년 남북한 상호 전력감축 단계에서 비무장지대와 차후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와 북한의 군비통제 계획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굿비와 드레난은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철수 혹은 재배치가 아니라 오직 미군의 감축만을 말하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공격용으로 배치한 부대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도 또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1992년 5월, 나는 전 미군 참모총장이었던 메이어(Edward C. Meyer)장군을 수행하여 북한을 세 번째로 방문하였다. 우리는 굿비-드레난(Goodby-Drennan)안과 유사한 군비통제안을 북한군 총참모부 부부장 권중용 중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한미 공군력의 우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고 “우리 영토 전역에 걸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한의 군사력을 상쇄시킬 지상군을 전진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굿비와 드레난이 간헐적으로 제시했던 미공군의 역할 제한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이 한반도의 인접지역에서 작전중인 미국 공군과 해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많은 관찰자들은 상호 불신과 기득권 때문에 군비통제안이 비

현실적이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이 지적했듯이 군사조약들에 종속된 남한과 북한의 군대와 연관 산업체들은 전력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 견해로 북한은 전력감축으로 남아도는 병력과 군사적 목적에 사용된 기금 및 노동력을 소비재 생산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전력감축에 대한 탐구적 논의와 함께 협상에서는 비무장지대 양쪽에 “공격용 무기 없는 지대”에 대한 제안들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탱크, 기계화 보병, 다연장 로켓 발사기, 자력추진포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제한되고, 보병의 수는 합의된 범위에만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최초의 것중의 하나가 노태우정권 시절 남북대화 연락관이었던 임동원이 장비는 인력보다 수량화하기 쉽고 입증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안했던 62마일 지대다.¹⁶⁾

남한은 전력감축을 위한 진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군사력과 정치적으로 강력한 군산복합체에 집중된 남한의 기득권세력은 지금까지 북한의 전력감축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들을 거부하였다. 확실히 북한에도 집권노동당의 강경노선자와 동맹한 군산복합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적 요인들이 그러한 감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당내논쟁에서도 우세하였다. 반대로 1인당국민소득(GNP)의 많은 부분을 방위비로 지출해오고 있는 남한에서의 감축압력은 북한에서 처럼 대단하지 않다. 남한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은 방위비에 책정된 GNP비율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성공적인 체제를 가능하게 한 반면,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질적 방위

16) Lim Dong Won, Conditions for Arms Contro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osun Ilbo(Seoul), October 10, 1989, p.6.

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재래무기 감축과 재배치를 진행하는 것은 휴전체제를 대치하는 핵심이다. 어쨌든 전망컨대 핵무기 통제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전략의 불가결한 요소다.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재래식 부대의 급작스런 공격에 대한 남한의 두려움은 남한이 미국의 핵방어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 역으로 한미핵전략은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군의 전진배치와 1994년 핵동결협정시 포괄적 핵사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남한은 공평함(equity)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만약 북한이 핵 선택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면 남한 방위의 기초로서 그들의 핵 억제 관념의 포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재래식 병력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념 말이다.

현재 남한에서의 핵무기 제거와는 반대로 미국은 그들의 태평양 잠수함 함대에 핵미사일의 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어떠한 분쟁에도 핵미사일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남한에서의 핵무기의 재도입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비핵지대에 관한 쌍방간 혹은 다자간 협약의 일부로서 지속적으로 한반도로부터 미국 핵무기의 제거 뿐만 아니라 미국 핵우산을 풀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에게 “당신들의 핵 선택을 포기하라, 그러나 우리는 남한과의 굳건한 안보협약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내 견해로 “특별 사찰” 문제는 타결되기 힘들 것이며, 한국

에서 핵무기 우선 사용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1994년 동결협약에 선행하여 북한이 얼마나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축적했는지 측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그것을 사용한다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2차 타격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1993년 6월 11일 미국이 북한과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위협과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원칙”을 수용한 것은 중요하다. 유사하게 1994년 동결협정 3조에서 미국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보증을 제공할 것을”을 서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서약을 이행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채, 1996년 7월 미국의 우선 사용금지 선언(일방 사용금지 선언) 혹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배치하지 않겠다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의 사용금지 약속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국은 그때까지 거부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 및 핵무기보유국가와 동맹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제외하고” NPT의 어떤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핵공격도 하지 않겠다는 1978년 선언을 폐기했다. 미국이 남한과 동맹하고 북한이 두 핵무기 국가와 동맹한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는 한국에서 핵무기 사용권의 확보만을 의미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안보협약이 점점 불분명해지는 반면, 여전히 유효한 1961년 중국과 북한간의 “상호 원조, 협력 우호 조약” 2조에는 “조약에 서명한 두 나라중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항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미국의 사용금지 약속은 남한을 위협한 상태로 노출시킨다. 이같은 이유로(by the same token) 다자간 비핵지대 협약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충분히 투명해진다면 미국과 남한에게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한 협약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배치하지 않을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핵우산의 제거, 상호 철군과 재배치 협약의 일부로서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재배치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4년 동결 협약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면했듯이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안정에 의해 수행되는 통일과 관련된 남북한의 공통된 이해의 부재 속에서는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의미있는 진전은 없을 것 같다.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

김 경 일·진 봉 군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 목 차 >

- I. 한반도통일의 국제적 환경우세
- II. 한반도통일의 내적 우세
- III. 한반도통일의 난점
- IV. 한반도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 V.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사고

냉전이 종식된 후, 한반도의 통일정세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에 대한 평가, 또한 중국의 대응된 입장과 대책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 학술분야의 논문이나 저서도 많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피력하는 바, 여러 논자들의 비판어린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I. 한반도통일의 국제적 환경우세

냉전이 종식된 후, 한반도통일의 국제적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에 매우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1)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로서 강대국정치적 결과이다. 동서의 미소대결이 없었다면 남북의 분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냉전이 종식되었고 동서의 미소대결도 사라졌다. 한반도의 관련국인 중·소(러시아)·미·일 등 주변 4국간의 관계도 이미 정상화되었는 바, 소·중·북조선을 한 극(極)으로 하고 미·일과 한국을 한 극(極)으로 하던 한반도의 대치구조는 이미 기본적으로 와해되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국제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오늘에 와서 아·태지역 최후의 냉전얼음덩이는 마침내 녹아버렸고, 특히 중요한 것은 수시로 폭발할 수 있던 군사대치의 화약통이 이미 그 심지를 빼버리고 안전 계수(系數)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 주변 여러 국가와 한반도 남북쌍방의 관계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차 승인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으로 소련(러시아)과 한국이 수교를 함으로써 남북대치의 균형을 깨뜨렸으며, 그 뒤를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되었다. 한국과 대중·소 수교는 지난 시기 뛰어넘을 수 없던 냉전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미국과 조선, 일본과 조선의 관계도 이에 맞춰 적극적인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1994년 10월 조·미는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적대적 관계로부터 완화의 분위기로

나아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연락처 상설문제에서도 진척을 보였다. 미국은 이미 남북대화를 연락처 상설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일·조관계도 적극적인 진척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일·조 두나라에서는 무려 8차나 되는 정상화회담을 가졌는데 후에는 핵문제로 중단되었다. 1995년 3월 일·조 두나라에서는 다시 접촉을 회복하였는 바, 일본의 집권3당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과의 회담에서 일치한 견해를 보았으며 과거를 청산하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전제조건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므로 미·일과 조선과의 수교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철저히 깨뜨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미·일·러·중 4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주변 4국은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반도의 전쟁에 휘말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한반도의 미래통일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며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실력과 영향도 지난 시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자기의 전략목표를 경제발전과 국력의 발전에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단호히 억제하며 세계 정세의 안정을 주요한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한반도에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것은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 뿐만이 아닌 미국의 제반전략 실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전략목표는 막강한 경제능력으로 세계정치대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아·태 지역, 특히 주변환경의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위기발생을 방지하며 최대한으로 자기의 경제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늘 “조선반도의 안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 일단 전쟁이 터지면 일본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부득불 전략상 조절을 하여 난관타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소련시기 군사적 패권전략으로부터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내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켜나가는’ 대한반도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건설을 위한 안정된 동북아환경을 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를 현 국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4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쌍방의 평화적 공존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주변국들은 비록 경제·정치 등에서 이해관계상 서로 충돌도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이 지역의 불안전요소를 해소하려는 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남북한은 그 어느 쪽도 전쟁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뿐더러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사정과 외부적 요소에 의해 소규모적인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냉전초기의 비교적 큰 규모의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은 극히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의 입장이나 한반도의 「비핵화」의 초보적 실시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현 정세는 여전히 ‘전후 이래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동북아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다고 보며 또 한반도통일의 기본 담보로 나선다고 보는 것이다.

(4) 주변4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태도에는 여러 가지 분기(分岐)도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소극적이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반도통일의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4개국 중 한반도통일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려 한다. 러시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다음이라고 본다. 보편적인 견해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유리한 초탈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며 한반도의 통일은 그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러시아는 외교적인 조력자(助力者)역할을 하여 남북통일을 도움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을 넓힐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는 통일 후의 한반도가 중·일 두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에 대하여 열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모대국의 절대적 영향 밑에서 실현되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원치 않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가 없다. 미국의 여론을 보아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가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짧은 시기 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가

지 견해는 다 어느 뎨가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 면으로 분석할 때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미국식의 민주와 기본적 자유를 담보하는 정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담보하며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국가관계를 초월한 특수한 전략관계를 맺을 것을 바라는 것으로서 결코 동북아에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이 아니라면 미국은 반대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시종 미국이익의 부합 여부를 전제로 추진시켜 온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입장으로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 후의 한반도가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장애 역할이거나 심지어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자기와 힘을 겨룰 수 있는 경제대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에 이르러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캐나다의 1.1배로 될 것이며 확대된 서방 10개국 안에 들어가게 되며, 전차, 자동차, 조선(造船)과 기계 등 주요한 영역에서 세계 다섯번째 안에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즉, 동북아의 두번째 일본이 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총병력은 160만인데 비해 일본은 26만의 자위대로서 한반도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남북통일 역량이 대외로 향하게 되고, 또한 일본에 대한 韓민족의 역사적인 특수한 불신임이 따르게 될 경우 한반도는 일본에

있어서 강력한 위협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의 대립된 쌍방이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국면을 바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최대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각자의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통일에 대한 주변 4개국의 태도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쌍방의 자체의 일이며 분기(分岐)도 남북쌍방이 부단히 해소하면서 공통된 인식과 이해를 넓혀가는 가운데서 자체적인 협상해결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주변 4국이나 국제사회는 부분적인 외적 영향이나 감독·담보작용만을 행사할 뿐이다. 하물며 오늘까지 주변국가들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본다.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표면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대업에 있어서 외적으로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파괴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II. 한반도통일의 내적 우세

한반도의 통일이 외적으로 일련의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적으로도 역시 많은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한반도의 남북쌍방은 모두 강렬한 민족동질감을 갖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자고로부터 단일민족을 형성하여 왔으며 1,300여년간 통일된 국가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한민족은 공통된 문화전통, 언어문자, 풍속습관, 민족감정과 공통된 민족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민족성은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견실한 기초인 것이다. 모든 한국(조선)인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부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농민이든 시민이든, 자유직업자든 공무원이든간에 모두 예외가 없이 강렬한 민족이익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이익을 자기행위의 지도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김대중총재가 지적했다시피 「민족주의」는 한반도통일의 '기조(基調)'이며 '민족주의를 기조로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의 마음 속에 있어서 통일은 지고무상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동질감은 일본인의 40년 식민지통치에서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런데 전후 50년 동안이나 한반도인민들은 민족분단이라는 고통을 안아야 했으며 1,000만 이산가족이 오늘까지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도 극히 제한을 받았고, 정치적 지위도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위기감과 긴박감은 날로 절박해지고 있으며 통일의 염원도 날로 강렬해지고 있다. '통일만이 우리민족이 세계선진행렬에 들어설 수 있는 바른 길'이며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야 앞으로 다가올 아·태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당한 주역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강렬한 민족동질감은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2)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장시간동안 남북관계는 줄곧 두가지 체도의 대립과 두 개 정권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쌍방은 모두 자기가 한반도의 합법적 대표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대치상태의 국면은 90년대 초반에 와서 끝내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돌파적인 진척을 가져왔다. 그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1991년 9월 17일 남북쌍방의 유엔동시 가입이다. 쌍방은 상호불승인, 상호대치하던 상태로부터 상호공존, 상호용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엄연히 두 개의 주권국가로 등장하였고, '남한과 북한이 대망의 체도를 상호 승인하고 존중'하기로 하였다. 둘째로는,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쌍방의 화해, 상호 불침범 및 상호교류의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협의서에는 폭넓은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즉, 상대방을 상호 승인하고 존중하여 정치·군사적 대결과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며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분기(分岐)와 쟁의를 해결하며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소와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제와 개발, 교통, 과학기술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보호, 신문출판영역에서의 합작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이산가족의 왕래와 상호방문을 실현하기로 한 것 등이다. 셋째로, 1992년 1월 쌍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선언에서는 남북쌍방이 핵무기를 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존,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표명하였다. 이 선언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의 법적 근거이다. 그 후 한때 이른바 「핵위기」가 발생하였지만 여러 노력에 의해 위기는 지나갔다. 「비핵화」는 행동

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1994년 조·미는 핵협상을 체결하였다. 1995년 8월부터 1996년까지 한반도핵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미·일·한의 전문가들은 조선을 6차례 방문하였으며 협상과 현지시찰을 몇차례 실시하였다. 협의는 기본적으로 이행되었다. 이 일련의 중대한 절차는 한반도의 정세가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며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을 표징(表徵)하는 바 그 의의는 사뭇 중대한 것이다. 비록 한반도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때때로 발생은 하지만, 또 심지어 얼마 전에 일어난 이른바 「잠수함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지만 전반적인 완화의 추세와 화해의 기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3) 남북의 경제협작관계는 부단히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한반도쌍방의 정치적 관계는 현재 일시적인 정체 상태에 있지만 경제관계와 내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9월에 남북은 북경에서 「쌀회담」을 가졌고, 1996년 8월 19일에는 조선 남포시에서 남북합자 기업 「민족기업총회사」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남북한은 간접적으로 부산, 나진, 남포 두 항로를 개통하였으며 남한의 공업품들이 이 항로를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갔다. 남북한의 무역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쌍방의 무역액은 1988년 102만 달러, 1990년 2,500만 달러, 1991년에는 1.9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1994년에는 2, 3억 달러, 1995년에는 근 3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조선 무역액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무역은 국내무역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한 것이다. 남한의 선진적인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결합된다면 공존공영하는 강력한 경제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의의는 단순한 경제효익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진척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것이다.

(4) 남북쌍방의 공통성이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

남북은 상술한 것 외에 남북의 학술분야, 여론분야에서 본 민족의 근대화과정에 발생한 역사사건, 역사인물 및 당대 일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에서도 점차 공통점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로, 근대화 역사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조말기 김옥균 및 개화파가 영도한 자산계급혁명에 대한 평가, 1894년 전봉준이 영도한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평가, 1907년 전후의 반일의병에 대한 평가, 1909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 김구선생에 대한 평가 등이다. 둘째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역사와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경각성 및 한일 독도분쟁 등 중대한 문제에서 남북이 똑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의 '자주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조선은 핵무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립자주의 외교방침을 견지하면서 미국이 제재타산을 포기하게 하여 평등한 담판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선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또한 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해 감히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가까이 하여 무기구매를 요구하는가 하면 "군사합작과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은 한국국방의 기본정책"이

라고 하였으며 한국의 국회의원 이세기는 117차 국회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수 없다”, “우리도 때때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동맹관계에 관한 한국의 인식도 이미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한국의 경제와 국방역량의 증강과 정치사회의 발전을 배경으로 국민의 자신감과 민족주의정서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민족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평등한 동맹구조에 대한 불만정서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형편은 기필코 화해와 협작을 증진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통일의 대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Ⅲ. 한반도통일의 난점

한반도의 통일에는 비록 우세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점도 적지 않으며 그것은 또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돌출한 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두개 국가, 두개 제도의 병

한반도 쌍방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는 바, 이것은 기존의 「1국가 2체제」가 두 개의 완전히 대등된 합법적 국가, 즉 「2국가 2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쌍방은 이를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과도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 두 개의 합법적 국가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병존할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관계도 국내문제로부터 ‘국제’문제로 전환되어 쌍방은 유엔의 성원으로서 국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자기의 국도(國度)를 의탁으로 피차간의 관계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적대적 관계를 갈등으로 하여, 특히 사회제도, 정치체제, 경제체제, 의식형태, 가치관념, 사회경제 발전정도의 여러가지 차이, 심지어는 근본적인 대립으로 하여 쌍방관계와 통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 한국학자는 “40여년간의 정치적 교화(敎化)로 하여 남과 북은 부동한 가치관, 세계관과 정치문화를 형성하여 왔는바, 이러한 차이와 충돌은 한민족의 재통일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를 독일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독일은 「2국가 2체제」 → 「1국가 2체제」 → 「1국가 1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한반도는 「1국가 1체제」 → 「2국가 2체제」 → 「1국가 2체제」 → 「1국가 1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2국가 2체제」는 상대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쌍방이 「2국가 2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며 통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절박히 느낄 때에만 ‘하나의 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성숙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또 앞으로의 한 시기동안은 조건의 성숙기가 아닐 것으로 본다.

(2) 남북간에는 신뢰감이 약하며 특히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으므로 냉전의 음영은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쌍방은 지금 군사분계선 두측에 무려 100만이라는 군대를 배치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군사배치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군비지출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10만의 정규

군과 300만의 예비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기 732대, 주전탱크 1,750대를 가지고 있으며 군비지출은 5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75만의 현역군인과 300~400만의 예비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기는 481대, 주전탱크(MBT) 1,550대, 주력전투함 39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F-16, MIAI 및 독일의 U-209형 잠수정 등 선진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비지출은 11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의 군대는 한두주일 내로 휴전선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쌍방은 모두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초월하고 압도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형세는 의연히 엄중한 바, 쌍방은 작은 사태로도 벌어지면 긴장상태에 들어가서 상호간 ‘남침’ 또는 ‘북침’이라고 공격을 한다. 조선으로 놓고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 한국군비의 현대화, 각종 형식의 군사연습, 미·일·한의 공조체제 등은 북방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조선의 이러한 고도로 된 준비상태를 ‘적화’와 ‘남침준비’로 간주하여 시시각각 긴장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1995년 10월 1일 김영삼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는 바 수시로 전쟁의 도화선을 태울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 2~3년은 비상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잠수함사건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위협을 더욱 경계하게 하였으며 상호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경계와 상호공격은 쌍방의 신뢰관계구축을 저해하였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의 통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쌍방은 평화통일에 이르는 국가구조의 형성 및 그 절차에서

근본적인 분기(分岐)를 보이고 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비록 쌍방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통일을 실현하는가 하는 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구조문제에 있어서 조선은 ‘한 개 민족, 한 개 국가, 두 가지 제도, 두 개 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제’를 주장한다. 즉, 북한과 남한 모두가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승인하고 용인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밑에서 쌍방은 같은 권한과 의무로 지역자치를 실시하며 연방공화국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절차에서 조선은 ‘모든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침’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세에 넘겨 천천히 해결하도록 할 수 있지만 사상과 제도의 분기를 초월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건립하는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한국은 이와 달리 국가구조문제에서 「국가연합」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구별은, 전자는 비교적 흩어진 형태이고 후자는 비교적 집중된 것이다. 전자는 중앙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원국의 사무를 지배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연방제」가 구성한 중앙정부는 그 성원국의 사무를 관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통일된 헌법과 대외왕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절차에서 4단계로 나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첫단계는 한민족공동체방안인

데 남북쌍방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교류와 합작을 통하여 신임관계를 세우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국가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네 번째 단계는 「한 개 민족, 한 개 국가」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두 방안은 뚜렷이 대립되는 것인 바, 조선은 한국의 방안은 분단의 영구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조선의 방안은 현실을 달리한 실현될 수 없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쌍방이 갖고 있는 이 두 방안은 단시일 내에 일치한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미국의 '소극적 정책'과 '냉전사고'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 진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과 냉전사고 및 지난 날의 패권주의 사고방식은 한반도의 형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선이 '평화적 이행'으로 변화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조선을 '미국의 세력범위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즉, 서방에서 말하는 이른바 「연착륙」인 것이다. 조선은 이에 대하여 이미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며 '주체사상으로 서방사상의 침습을 방지'하고 있다. 조선은 결코 미국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의연히 한반도에 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강력한 위협의 힘을 유지하고 있으며, 때때로 한반도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 12월에 한국에서의 핵무기를 전부 철수하였다고 하지만, 후에 한국에 패트리엇미사일(愛國者爆彈)을 배치하였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선포하였지만 최근(10월)에 또 한반도부근에서

미·한 군사연습과 미·일 연합군사연습을 벌였다. 미국의 인디펜던스호(獨立號) 항공함대의 선장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수시로 조선반도에서 참전할 준비를 하여 왔으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미국은 아직도 미·조 관계를 개선할 일정표를 내놓고 있지 않으며 조선에 대해 이른바 ‘도전에 맞서며 대응에 회피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핵위기가 지나간 후 미국은 이미 조선문제를 ‘눈썹의 불’로 생각하던 태도를 바꾸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조 관계 개선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V. 한반도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이상으로 한반도통일의 우세와 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아래에 총체적 정세 및 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귀납과 총화를 하려 한다.

(1) 한반도통일의 우세와 열세를 비교할 때, 긍정적으로 우세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본다. 한반도의 통일대업은 역사의 필연적 추세로서 인심에 따른 것이며 그 기세는 막을 수 없는 바, 통일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김대중 총재가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힘으로 동북아에서 우리의 힘으로 주도권을 발휘할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네 총각이 한 처녀에게 청혼하는 조건을 창조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말이 현실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행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며 심지어는 어

떠난 형태의 충돌, 긴장 또는 반복적인 퇴보같은 것도 피면(避免)치 못할 것이지만 큰 기후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총체적인 추세는 역전할 수 없을 것이다. 종종 생기는 불유쾌한 사건들은 몇해전의 핵위기와 마찬가지로 큰 위험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며 ‘비가 온 뒤에는 날이 개일 것’이다. 총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대완화’ 가운데 ‘작은 긴장’과 불안정한 요소가 뒤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주축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본다.

(2) 현재로부터 앞으로의 장기간 한반도에는 두 개의 합법적인 나라가 평화공존할 것이다. 쌍방은 정치적 대화를 통하여 점차 피차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며 교류와 합작으로 상호오해, 상호신임을 쌓아가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조건을 창조할 것이다. 통일전의 과도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는 공통된 인식과 분기, 합작과 경쟁, 긴장과 완화가 병존·병행하게 될 것이다. 쌍방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마찰과 모순, 심지어는 작은 충돌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긴장관계는 필연적으로 점차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굴곡적인 과도형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지난 냉전시기에 누구도 누구를 먹어치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의 「냉평화시기」에는 더욱 상대방을 먹어치우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남과 북의 정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지도적 위치가 비교적 튼튼하며 계승의 기초가 확고히 다져졌고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은 이미

조선인민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었으며 각급 지도일군과 인민들은 곤란을 극복할 결의가 굳세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인 압력은 내부단합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경제적으로 물론 몇년간 하강추세를 보여왔고 또 연 2년간 큰 수재를 입었지만 그에 따른 자구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동시에 외부의 원조 등으로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은 지금 여러면에서 경제개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농촌에서는 「분조도급제」를 실시하여 초과부분의 알곡을 자유처분할 수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른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각적인 대외무역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외자도 입도 이미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조선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나라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자기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곤경에서 벗어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외의 여론들이 조선에서 「기황(饑荒)」 때문에 ‘무모한 남침’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하는 부정부패 척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1997년 대선에서도 정국에 파문은 일어나겠지만 큰 동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초과하였는가 하면 경제규모가 세계8위, 무역규모가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한국정국의 안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제반 한반도의 정세에도 이로울 것이다. 한마디로 두 개 정권의 병존은 상당한 기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반도에서의 무력통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식통일」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가지 가능성 밖에 있을 수 없다. 하나는 무력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해결하는 것이며 하나는 '독일식' 방식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어느 한쪽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어느 한쪽을 병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적인 협상으로 평등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국내외여론과 학술분야에서는 거의 일치하게 세번째 방안을 지향하고 있다. 무력으로의 통일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주변 4개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남북쌍방 어느 일방도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또 군사적으로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싸우면 두쪽이 다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궤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철저히 소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독일식 통일방식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첫째로, 한반도와 독일은 형편이 다르다. 독일의 통일은 소련과 동구가 와해되고 독일의 지도자가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어 내부적으로 와해되어 정권과 체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이다. 그렇지만 조선은 계속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의 평화적 연변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둘째로, 독일통일 당시 서독은 천억달러를 지출하였지만 그래도 통일 후에는 여전히 여러 면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북한을 서독식으로 통일하려면 소요경비가 그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의 경제력이 동서독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통계편람」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치는 조선의 10.6배라고 한다. 그러므로 서독식 통일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한국 국내에 일부는 이 방식을 흠상하지만 보편적인 여론은 이 방식이 한반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개가 막대한 독일의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점진적인 통일의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통일방안을 비교할 때 역시 세번째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총리 이수성은 얼마전에 명확히 한국은 “병합의 방법이 아닌 평화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는 정부는 줄곧 북한이 안정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V.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사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그 정책이 우선 중국의 총체적인 전략과 총체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 학자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대한반도정책을 국내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 수요에 귀속시키고 있다. 당면 중국은 개혁·개방의 추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는 학자신분으로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

이 있다고 파악한다.

(1) 중국은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여 나갈 것을 희망한다.

평화와 안정은 남북에 있어서 부민안국(富民安國)을 도모하는 절실한 요구이며, 역시 중국이 계속 개혁·개방을 해나가며 ‘아태에 발을 붙이고 주변의 안정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전략의 주요한 요구인 것이다.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안정과 평화의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주변에 몇 개의 핵국가, 예컨대 핵조선, 핵한국, 핵일본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며, 종래로 주변국의 내란이나 분열, 충돌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유일한 희망은 한반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평화롭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평화 속에서의 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것이다.

상술한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건의와 조치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증가시키는 안정에 불리한 행동을 반대한다.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실시해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은 바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안(懸案)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관련 국가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 쌍방의 의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여 일찍 1958년에 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1994년 12

월에는 또 조선 측의 건의에 쫓아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대표를 소환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한반도 쌍방의 자주권을 존중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쌍방 인민들의 의사를 고려한 기초 위에서 자기의 행동을 택할 것이다. 중국은 또 다른 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사를 한반도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인민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양호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3) 중국은 민족통일을 위한 한반도 쌍방의 노력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

중국은 분열의 고통을 겪을대로 겪은 나라로서 자기의 체험으로 한반도인민들의 절박한 통일염원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광명정대하며 언행일치한다. 국내의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큰 위협을 가져올 것이며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은 타국을 침략한 전통이 없으며 한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는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후의 한반도는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로 부상할 것이며 중국과는 가일층 경제무역관계를 넓혀나가게 될 것인 바, 이것은 중국의 경제건설, 특히 중국 동북지역과 화북지역 경제건설에 추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전략적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국가 사이에 있는 한반도는 그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으로 하여 주변국가 가운데서 균형된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중립적인 자위만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일본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만약의 경우 한반도에 독일식통일이 이루어져 남한이 미국의 힘을 빌어 북한을 병합하였다고 할 때(현재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에도 크게 경황실색(驚惶失色)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서 는 미국통제 하의 한반도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안보면에서 중국에 대한 일정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일된 한반도가 결코 미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주의식의 증강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보며, 결코 중국과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설혹 ‘독일식통일’이 이루어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그냥 지속된다고 하여도 또 미국의 병력이 압록강까지 밀려왔다고 하여도 중국군대는 완전히 자기의 변강안전을 지켜낼 방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토나 인구비례로 보아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긴장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남과 북의 화해와 합작, 대화와 교류를 지지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선결조건이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야만 냉전의식을 극복하여 불신임을 상호신뢰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대화와 왕래를 통하여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남과 북 쌍방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래 남북쌍방은 여러 차례의 적십자, 경제, 체육, 총리급 등 형식의 회담을 진행하면서 협의도 맺어 왔다. 중국은 이 모든면의 노력을 지지하여 왔다. 사실상

한반도쌍방의 많은 접촉이 북경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쌍방의 화해를 위한 건설적인 추진역할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

(5) 중국은 조선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증진시키는 동시에 중·한 우호관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과 조선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말까지 조선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132개이고 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182개이다. 쌍방이 동시에 수교한 나라는 127개이다. 중국은 앞으로 조선과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나는 오랜 벗이고 하나는 새 벗인데 둘 다 훌륭한 벗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의 외교정책이나 자신의 국가이익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며 한반도 쌍방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광명정대한 것이다. 조선과 한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 서로 상호내정불간섭을 견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호혜호리(互惠互利) 원칙을 적용하여 상호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서로 무력위협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3자의 상술한 정책과 행동은 중·조 우호관계와 중·한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입지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로 되고 있다. 중·조관계와 중·한관계는 모두 평화공존5항원칙(平和共存5項原則)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국가관계이다.

(6)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체제를 건립하려는 여러 면의 노력을 지지한다.

현재 관련 각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보장체제의 건립」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조선측이 1994년에 내놓은 것이다. 조선외교부는 이 해의 4월 2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명확히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며 화해를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제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엇미사일을 배치하고 한·미 공동군사연습을 실시하며 작전장비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일찍이 미국이 1956년 6월에 중립국감찰위원회시찰소조를 자기의 군사통제구역에서 철수시켰고, 따라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협정은 평화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6년에 조선측은 또 조·미가 「임시협정」을 체결하자는 새로운 건의를 하였으며, 그것을 「정전협정」으로부터 「평화협정」으로 이전하는 과도적 조치로 할 것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은 1996년 3월 29일에 인민무력부제1부부장의 담화방식으로 미국 등에 정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분계선 남측에서 전쟁전야의 심상치않은 군사행위를 발견하였기에 판문점주둔 조선인민군은 명에 의해 자기의 조치를 취하여 군사분계선관리 및 비군사구역의 관리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이 새로운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조선·한국·미국·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진행하여 평화협정체결 등 관련문제들을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성명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할 것을 재천명하였으며 “현

행 정전협정은 마땅히 지구적인 평화협약이 나올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성명이 발표된 후 각국의 반응은 일치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지를 표명하였고 러시아는 회담 밖에 밀려나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6자회담(일본과 러시아 포함)을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다. 조선은 연구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측이 한국과 함께 설명하겠다는 요구를 제출하여 조선은 그 의도에 의심을 품고 이에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중국의 입장은 4자회담 건의에 대해 「이해」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은 냉전의 잔여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지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며 관련 각측이 의견을 조성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이 그 가운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필자는 중국의 입장이 적극적인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통일진척에 유리한 조치나 건의에 대해서 중국에서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화해를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통일의 과정을 단축시키는데 있어서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者會談에 대한 日本의 立場과 役割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縣立大學)

< 목 차 >

- I.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
- II. 심각한 식량부족
- III. 북한대외정책의 방향
- IV. 일본의 대(對)한반도정책의 기초
- V.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
- VI. 중단된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 VII. 일·북 관계개선의 예상
- VIII. 바람직한 일본의 정책

I.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

1996년 4월 16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국·미국·중국·북한에 의한 4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4자회담 제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지지한다’고 하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자회담이 제안된 4월 16일 하시모토(橋本) 일본총리대신은 즉각 코멘트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지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늘 김영삼 한국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평화달성을 위한 4자회담의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크나큰 주도체(主導體)로서 일본으로서도 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일본으로서는 4자회담이 실현되고 이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분위기가 조성되어 현행 휴전협정을 대신하는 지속적인 평화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합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그러한 평화가 달성되기까지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도발하지 않도록 재삼 권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방한하는 클린턴 대통령과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한반도 정세에 관해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연락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1996년 9월 26일 유엔총회의 일반토론연설에서 하시모토 총리는 재차 4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이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금번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재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4월에 한·미 양국정상이 제안한 4자회담의 실현은 지극히 중요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차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입장은 4자회담 개최 지지를 일관해서 표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4자회담의 일원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불만 및 비판은 일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점에서 일본의 입장은 러시아와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한반도 문제 해결은 아주 어렵고, 더욱이 일단 그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작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장래 어느 시점에서는 일본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이른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혹은 ‘한반도통일 후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재정적 공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본은 현시점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언젠가는 초청된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은 러시아와 크게 다르고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한, 한국문제 논의로부터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도 느끼지 않고, 다만 지금은 4자회담을 지지한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현황을 검토하고 일본의 대(對)북한 정책을 개관한 후에 일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심각한 식량부족

지금 북한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현상이 어떠한가 혹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세가 바뀌어가는가라는 확실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되어지고 있는 몇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북한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식량사정의 악화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식량이 부족하고 그것이 향후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지만 적절한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작년말 평양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 하나만을 들어보더라도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처음부터 북한은 과거 반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세계에 대하여 지원 및 원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 물론 그 이면에서 중국과 소련에 대하여는 항상 원조를 요청해왔다. 구소연방의 붕괴 후 러시아로부터 원조는 정지되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현재까지도 원조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초순에 홍성남 부총리가 방중(訪中)하였을 때는 중국이 제8차 5개년계획기간(1991년~1995년) 중에 제공한 것과 동

등 규모의 경제협력을 제9차 5개년계획기간(1996년~2000년) 중에도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부 세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이 작년에 2개의 '예외적 조치'를 취했다. 먼저 일본에 쌀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이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다. 계속해서 북한은 UN에 대해서 수해복구 원조를 의뢰해왔다. 1995년 7월에서부터 8월에 걸쳐서 북한은 세 번에 걸쳐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입었다. 그것이 곡창지대를 덮쳤기 때문에 식량부족은 더 한층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북한은 즉각 유엔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어찌됐건 지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장고의 결단이었다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육신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일본 및 유엔에 원조를 의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현재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문가 중에서는 기아 일보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UN 식량기관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거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대량의 기아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난민의 유출도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단 기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급커브를 그리면서 증가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확실히 과거 1980년대에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 일어난 기아상황은 그러한 기아자의 급증현상을 보여주었다. 북한도 같은 길을 걸을지 모른다. 이러한 관측은 미국정부는 물론 (미국)사회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평가는 상당히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식량부족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험한 수위에 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한국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이 상당부분 대규모의 군사용 식량 비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되는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식량부족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식량비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한 관측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 어느 쪽의 견해가 실체에 가까운 것인가 정확히 판단할 자료를 가질 수 없다. 북한이 실체의 공포에 아주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보아온 것처럼 북한이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식량부족의 심각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식량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북한의 체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는 나뉘어져 있다. 한편으로 우리들은 과거의 구소련과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기아가 공산당지배를 전혀 붕괴시킬 수 없었다는 역사를 알고 있다. 북한도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중국 및 구소련의 경험이 그대로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여부는 당연한 것

이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정확한 판단의 재료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만약 북한이 체제위기에 직면할 경우, 과연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주 낙관적이다. 확실히 현재의 남북한간의 국력 격차, 우선 군사적 격차를 전제로 하면,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해도 좋다. 또한 북한이 식량과 함께 심각한 석유부족에 처할 것을 예상한다면 남침을 단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때때로 비합리적 판단을 하며 자살행위를 자처할 때도 있다. 확실히 미국의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며, 이른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상황에 북한이 처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주시하며 향후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Ⅲ.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그럼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일(對日)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대일(對日)정책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사망하고부터 2년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김일성 유훈(遺訓)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어 왔고 김정일의 독자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은 일체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국가주석에도 조선노동당총비서에도 취임하지 않는 상태가 적어도 일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김정일성향’을 농후하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대외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은 우선 없다고 생각해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은 ‘김영삼정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든 혹은 적어도 남북대화의 재개를 단행한다면, 북한은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까지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에 분주했고 평양에서의 제1회 회담 뒤에는 자신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더욱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성명’의 이행에 관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김일성유훈(遺訓)’이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일체제는 그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만한 여유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한편에서 남북관계의 정체가 미·일·북한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체제(體制)의 동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불안 때문에, 북한은 ‘포스트 김영삼’시대가 도래

할 때까지 이른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금은 북한의 대외정책 중에서 가장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미(對美)정책이다. 김정일 정권이 대미(對美)관계를 악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행방불명된 미군의 유골 송환문제, 장거리미사일의 개발 수출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및 협력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미(對美)국교정상화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미(對美)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북정치연락사무소’의 개설에 지금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자세를 강경 및 유연의 어느 방향으로도 크게 전환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당분간 미·북관계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대(對)중국, 대(對)러시아관계에 대해서 본다면, 먼저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의 원조·협력의 재개가 예상되어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對)러시아자세가 가까운 장래에 변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상황과 같은 ‘대만카드’(Taiwan Card)를 이용해, 즉 대만과의 비정치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교류를 진행시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대(對)중국자세가 그이상 적극적 혹은 우호적인 것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IV. 일본의 대(對)한반도정책의 기초

이상으로 최근의 북한을 둘러싸고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대(對)한반도정책, 특히 대(對)북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다음 4개의 축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2)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3)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유지, 증진은 일본외교의 한 축이다.

(4) 이상의 3개의 축과 저촉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혹은 국교정상화 교섭에 일본은 성실하게 대처해간다.

첫번째 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지리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공헌하고

자 하는 것, 예를 들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평화적 통일방법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긴장 완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점은 1992년 1월 17일에 한국국회에서 미야자와(宮澤) 총리가 행한 ‘정책연설’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조금 길어지지만 다음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일본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의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민족적 염원을 여기에 많은 한국민을 친구로 하고 있는 일본사람으로서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면서도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한반도의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 중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북한에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부모 및 친척들과 재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령이 되고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에게 보내진 편지에는 북한에 이주한 딸과 여동생의 재회의 염원이 절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하루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에서, 제가 특히 주목했었던 점은, 귀국의 제의에 의해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솝이야기에도 있는 것처럼 외투를 벗는 것은 북풍이 불었을 때보다 따뜻한 햇볕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속에서 반세기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에게 동포로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대해오신 귀국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제사회에 영입

시키는 것이, 그 개혁과 변화 특히 개방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귀국의 사고(思考)에 감명했습니다. 귀국이 북한의 유엔가입을 지지하신 것도 그러한 기분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귀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도록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 저희나라는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모든 분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것을 기원하고 향후 귀국과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교섭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두번째의 축은 2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의 최종적 책임은 남북 당사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일·미·중·러 등의 주변 제(諸)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할 때라도 ‘자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도록 그 책임의 자각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두가지 점이다.

세번째 축에서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거 30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우호관계를 유지시키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 확대시키는 것을 일본국민은 희망하고 있다.

네번째 축에 대해서도 이미 일본국민 사이에는 일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에 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소원해지거나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일본국민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V.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에 입각해서, 다음은 북한에 대한 과거 6년간의 일본의 자세에 대해서 재고(再考)해 보고자 한다.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에 걸쳐, 가네마루(金丸)전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의 합동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 대표단의 방북 사전목적으로서 들고 있던 점은 다음 2가지 점에 있다.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일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것’.

(2) 1983년 11월부터 북한에 억류되어온 제18후지산마루(富士山丸)호의 2명의 선원 석방·귀국을 실현시키는 것.

따라서 일본측은 이 대표단의 방북이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개시의 계기가 될 것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측은 평양을 방문한 자민당·사회당대표단에 대하여 ‘국교수립’을 전제로 하는 관계개선의 제안을 한 것이다. 마치 1990년대에 들어 현저하게 된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였다.

타나베(田邊) 사회당 방북단장에 의하면, 북한측이 국교정상화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했다고 한다. 첫째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이며, 둘째로 일본의 일부에서 국교수

립 이전에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어느 쪽도 평양측의 사정을 솔직하고 명확히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거론한 것은, 1989년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우선은 동구·소련 등이 ‘탈사회주의’에 크게 바뀌어가는데 대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실제로 1990년 1월 1일의 「신년사」와 같은 해 5월 24일의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일성주석은 위기의식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구·소련의 변화에 호응하는 형태로 한국의 「북방외교」가 급속히 성과를 거두어왔다. 한국은 동구제국과의 계속되는 국교수립에 이어, 1990년 6월에는 한·소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렀다. 9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방북한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북한에 한·소 국교수립을 통보했다고도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과도, 또한 정치적 관계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선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현저한 관계진전을 거두었다. 더욱이 북한측으로서는 이미 소련 및 동구제국이 중요한 ‘경제적 공급자’로서의 의미를 잃고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90년 1월의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이후, 평양은 ‘증산(增産)·절약(節約)투쟁’을 재차 언급하여, 이른바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본에 대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교적 열세의 만회를

피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의 제안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면, 자민당·사회당·조선노동당의 3자공동선언문(1990년 9월 27일)에 북한이 강력히 주장하여 삽입한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더라도 그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거기에는 국교정상화 이전 단계에 있어서도 일본측으로부터 이른바 ‘보상’의 성격을 가진 경제협력을 얻고자 하는 고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당연하지만 일본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1990년 11월 3일~4일, 11월 17일, 그리고 12월 15일~17일에 북경에서 3차례 열린 일·북 국교정상화 예비교섭에 있어서 북한은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도록 강경히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북한측의 당돌한 국교정상화 제안에 대해서 일본측은 긍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이미 평양에 대해 ‘무조건대화’의 실현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긍정적 대응을 산출한 요인으로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1989년 1월 20일 일본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측에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균형을 염두에 두면서 일·북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

하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우리나라의 자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로 직결되지 않는 한 일·북관계의 개선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도 우리나라는 제18후지산마루(富士山丸)호의 조기해결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작년부터 제안해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북간의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또한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옛날보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무조건 응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적도 있어서, 1990년 9월에 평양으로부터 국교정상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 놀라기는 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도록 한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고, 무조건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VI. 중단된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그런데 1990년 12월 15일~17일에 열렸던 제3회예비교섭에서 본회담의 의제는 ① 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②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제문제, ③ 정상화에 관련된 국제문제, ④ 그외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제문제(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및 일본인 배우자의 귀국문제 등)의 4가지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일·북 정상화교섭 본회의는 제1회 회담과 제2회 회담을 각각 평양과 동경에서 개최한 뒤,

제3회 회담 이후는 북경에 장소를 옮겨, 현재에 이르기까지 8회 개최되었다. 더불어 일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회 = 1991년 1월 30일 ~ 1월 31일
- 제2회 = 1991년 3월 11일 ~ 3월 12일
- 제3회 = 1991년 5월 20일 ~ 5월 21일
- 제4회 = 1991년 8월 30일 ~ 9월 2일
- 제5회 = 1991년 11월 18일 ~ 11월 20일
- 제6회 = 1992년 1월 30일 ~ 2월 1일
- 제7회 = 1992년 5월 13일 ~ 5월 15일
- 제8회 = 1992년 11월 5일

1991년 1월에 개최된 제1회본회의에 있어서 일본측은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으로 회담에 임할 것을 명백히 했다.

“일·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 국제적 측면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각국간의 상호의존이 정치, 경제, 정보 등 각 방면에서 고양된 결과로서 어떤 국가도 자국만이 좋다면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일·북관계의 개선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북관계가 가지는 국제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도 환영받고, 국제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일·북 국교정상화에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불편한

관계를 시정한다고 하는 2국간의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양면이 있고, 일본정부로서는 일북의 양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교섭을 진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일본측 대표 나카히라(中平立) 일북국교정상화 수석 정부대표의 기조발언, 1991년 1월 31일)”

처음부터 이 국제적 측면 내에는 일본정부가 가장 주의했던 점은 한국의 반응이다. 1990년 10월에 가네마루(金丸) 전부총리의 방북내용에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러한 일본정부의 관심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이 일·북 국교정상화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다음의 5가지 점에 유의해주도록 하는 요망을 가네마루(金丸) 전부총리에게 제시했다.

- (1) 한국측과의 충분한 협의
- (2) 남북대화와의 연계
- (3) 국교정상화의 전제로서의 북한의 ‘핵 의혹’ 문제의 해결
- (4) 일본의 경제협력이 국교정상화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결되지 않는 형태
- (5)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

그후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일본정부는, 전술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5항목의 요망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의 교섭에 임해왔다. 확실히 한국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자세를 일본정부

는 취해온 것이다.

그런데 북한측에는 전술한 것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기타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난항을 거듭해 8회의 회담을 통해서 이렇다할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과거 8회에 걸쳐 본회담을 개최한 것에 의해 북한의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는 넓어졌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 청산문제 및 핵무기개발 의혹문제를 둘러싼 양자간의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제8회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결과 일·북교섭 재개문제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저하되었던 것이다. 과거 4년간에 일·북간의 장벽은 높아졌을 뿐 조금도 낮아지지는 않았다. 가까운 장래 일·북 정상화교섭이 개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개최된 교섭이 단기간 내에 눈에 띄게 진전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VII. 일·북 관계개선의 예상

김일성 사후,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對)일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이 되었다. 그 주된 이유가 국교정상화에 의한 일본으로부터의 보상 획득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특히 1995년 3월 이후로 북한은 '국교정상화·교섭'으로부터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핵무기개발 의혹문제 등 '국교정상화에 관련된 국제문제'가 분리되도록 노력해왔다. 가능한 한 조기에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 일본으로부터의 자

금(資金)·기술(技術)을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에는(1996년 여름 이후) '국교정상화'와 '과거 보상'을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제기하게 되었다. 요컨대, '국교정상화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문제이지만, 일본의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문제이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그점을 북한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시점에서 태도는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일·북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리라고는 당분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이 말하는 '무조건'이 아니면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좋다. 요컨대, 핵문제도, 미사일문제도, 남북한문제도, 이은혜문제도 모두 의제에 포함시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거부하는 한 일·북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미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북한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의 대(對)북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북한이 「4자회담」제의를 수락하지 않는한 일본국민이 일·북교섭의 재개를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둘째로, 일북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이른바 일본인 처의 일시귀국(일본에의 고향방문)을 적극적으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회 100인 정도로 1년에 3~4회는 실시해야

되는 것이다. 1996년 4월 이후 판문점에서의 군사적 시위행동, 위장달리 지폐 사건 등에 의해 일본국민의 대(對)북한이미지는 지극히 나빠졌다. 그것은 지지(時事)통신사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4월 이후의 수치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응답자의 50%이상이 북한을 '싫은 나라'로 들고 있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북한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악화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북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취할 '인도적 조치', 즉 일본인치의 일시 귀국조치는 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셋째로, 일·북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일본이 제공한 50만톤의 '쌀지원'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또한 분명히 사의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지원분(20만톤)의 쌀의 수송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로, 일·북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1995년 9월과 96년 6월에 일본이 거출을 결정했던 UN을 통한 합계 650만달러(95년 50만달러, 96년은 600만달러)의 대(對)북한식량지원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또한 분명히 사의를 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겠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북정상화 교섭은 언제까지라도 재개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정상화에 이르는 길은 극히 소원하다. 교섭이 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교섭을 진전시켜 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핵무기개발 의혹 문제의 완전 해결을 꾀할 것이 필요로 된다. 북한은 가능한한 빨리 '평양 의혹'을 초래한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1991년 12월)에서 그 보유를 분명히 부정했던 핵연료재처리시설을 솔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할 필요가 있다. 「미북합의」(1994년 10월)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늦다.

둘째로, 미사일문제의 완전 해결이 필요하다. 결국 미사일의 본체, 부품, 기술의 수출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10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를 지닌 탄도미사일(이른바 노동1호 및 노동 2호를 가리킴)에 대해서는 그 개발을 중지하고, 또한 완성된 탄도미사일은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이상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초부터 일·북 국교정상화 목적의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전혀 예상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국교수립에 이를 수는 없다. 적어도 상시적인 남북간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것이 최저한의 조건이 된다. 이상의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전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다만 남북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일·북정상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된다. 비록 교섭이 향후 10년 이상 걸리더라도 일본으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이 일·북 정상화교섭의 재개에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교섭재개의 전망은 서 있지 않다. 다만 언젠가는 북한이 그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또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던지, 「4자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종래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후에 일본과의 교섭을 추구한다면, 일본은 그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북 양국정부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갖추어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고 북한에 전달된다는 점 하나만을 보더라도 일·북 정상화교섭의 추진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일본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상화', 그것에 한해서는, 일본 측이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으며, 또한 그럴 의도도 없다. 북한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응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끈기있게 설득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일치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한국의 이익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만약 일·북 정상화교섭이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화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VIII. 바람직한 일본의 정책

그런데 1996년 4월에 한·미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 개최 제기에

대해서 7개월이 경과되었지만 북한은 아직 공식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제안 내용을 연구 중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움직임을 지켜보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만약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 「4자회담」을 거부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생각보다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 머무는 것이라면 「4자회담」제안을 거부하며, 그 전제로서 재삼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구한다고 하는 두 개의 선택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북한이 결국은 4자회담을 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식량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기 이전에 한·미측으로부터 식량원조가 선행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쨌든 그러한 점을 북한이 인식할 것이고, 그 결과 4자회담에 응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평양이 4자회담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남북대화의 재개에 직결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할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은 특정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4자회담이 지속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응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긴장 격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대(對)북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평양이 한국에 대해 전면적 혹은 한정적 군사공격을 할 수 없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4자회담」의 개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충돌의 재발방지는 지속적으로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의 재발은 한국만의 비극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변대국에도 심각한 타격과 손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일본도 한반도의 전쟁방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한사람이라 말해도 좋다.

일본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식량지원을 하여야 하는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인도적 관점’의 틀을 넘어,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지는 식량지원이다. 북한을 기아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대(對)한국군사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점에서 식량지원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대(對)북 식량지원을 제의하더라도 한국은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먼저 일본은 한국의 설득에 주력하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형태의 다국적인 북한식량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에 대처할 때 한국과의

협조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한국과 공동으로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국의 자세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일본이 출선해서 북한식량지원에 나설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충돌 재발 방지는 일본으로서도 최우선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식량지원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평양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1) 북한은 자국의 식량부족상황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점을 북한이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어느 정도 식량이 부족하고, 그 중 몇할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기대하고 있는가, 또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을 어떤 형태로 일반국민에게 배급하고 있는가. 만약 향후 일본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을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한 배급경로를 일본에 자세히 알려줄 용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2) 일본의 식량지원은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족분의 전부 가 아닌 일정량의 충당에 그친다. 그 이상 규모의 식량지원은 적어도 평양이 기존 농업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까지는 검토의 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

(3) 이상 2가지 조건을 북한이 거부할 때는 특히 전자의 확실성에 대해 거부한다면 만약 그러한 행위가 식량지원이 실행되는 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일본은 대(對)북한 식량지원을 중지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부 대북지원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한 국민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다만 군부의 강화 및 김정 일체제의 연장에 직결될 뿐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역으로 보면 그러한 조건부 지원이 북한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원을 단념할 것이다. 그리고 평양이 도발적 행위로 나올 위험성에 새롭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 정도의 각오 위에 대북한 식량지원을 고려한다면, 한국측이 만약 반대하더라도 일본은 식량지원을 실행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韓·美·日) 삼국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 입장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미·북간 및 일·북의 관계개선에 우선되든가, 적어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으로서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히려 미·북관계 및 일·북관계를 우선해서 개선시켜가는 방법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때는 미북 및 일북간의 관계개선이 바로 ‘정상화’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른바 ‘한정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일·미양국이 지향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그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식량지원을 넘어 미·북관계 및 일·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은 평양에 대해서 강력한 지렛대(leverage)를 가지는 것이 된다.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을 남북대화 재개에 유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향후 일본은 장래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의 고조를 방지하고, 나아가 남북대화의 재개 및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김 창 진
(연세대학교 교수)

< 목 차 >

- I. 서 론
- II. '국가이익'의 새로운 정의와 최근 러시아 대외정책
- III.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방식
- '4자회담'과 '다자간국제회의' 구상
- IV. 맺 음 말

I. 서 론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4자회담’을 제안한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회담의 성사를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중요한 지원자로 간주되는 중국은 간접적

인 경로를 통해 참가의사를 피력하는 수준에 머물러있고 정작 핵심 당사자인 북한당국은 4자회담의 제안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거나(초기의 '설명회' 개최요구) 또는 군부 주도로 북·미간 직접 접촉을 주장함으로써 현재로서는 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¹⁷⁾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 4자회담의 긍정적인 의미와 그 기대되는 성과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회담의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그 발상과 구조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얼핏보아 이 4자회담 제안은 참여국들의 선정문제에서 “교전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루 반영”¹⁸⁾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거나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세력균형의 상황으로 보거나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제안은 한반도가 겪은 역사적 경험과 그 지정학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것은 지역적 분쟁의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미리 지적해 둘 것은 발표자가 러시아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것을 전적으로 옹호할 의도가 없으며,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할

17) 그간의 4자회담의 교섭경과에 대해서는 정해구, “4자회담과 남북대화 전개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발표논문, 연세대, 1996.10) 참조.

18) 중앙일보, 1996. 4. 18.

뿐이라는 점이다.

II. ‘국가이익’의 새로운 정의와 최근 러시아 대외 정책

‘4자회담’ 제안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대외정책의 기초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1년 소련체제의 해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1993년말 - 94년초를 기준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시기 구분될 수 있는 질적전환을 보여주었다.¹⁹⁾ 주지하듯이 옛소련의 국제법적 지위를 계승한 신생러시아연방의 초기 외교정책의 기초는 자유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친서방주의로 요약될 수 있었다. 엘진과 그의 외교정책 브레인들은 국내 ‘민족·애국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미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기여이 동참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서구문명이야말로 러시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범이라는 인식이 급진적인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러시아사상사에서 슬라브주의자들과 논쟁했던 서구주의자들의 역사인식 및 국제정치관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95년까지 외무장관을 맡았던 안드레이 코지레프는 바로 그러한 정향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었다.

19) 이에 대해서는 А.Г.Арбатов “Росс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 90-е годы”, МЕМО, N 7, 1994, с.9-11 참조.

1990년대 초반 이같은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초에는 신생 러시아연방이 국제정치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을 추구해온 것으로 간주되어 온 소련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또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새로운 경향은 옐친정권이 추구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방향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주어졌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더 이상 팽창주의적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경제구조의 개혁이 초미의 과제인 러시아로서는 서방측의 원조를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대외정책의 그러한 서구지향적 경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자문을 받은 예고르 가이다르 총리 주도의 '충격요법'에 의한 경제개혁은 자유민주체제의 버팀목이 될 중산층의 형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대신²⁰⁾ 급속한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다. 정치적 수준에서 옐친정권은 소련체제의 복구를 주장하거나 복고적인 대(大)러시아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애국세력'을 합법적인 틀내로 완전히 포섭할 수 없었으며, 이른바 '의회파'로 불린 체제내 반대파와의 정치투쟁에서도 타협적인 대안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급기야 옐친은 서방적 잣대로 보았을 때 대의제 민주주의의 심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사당 건물에(그 속에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들어가 있었다.) 대포를 쏘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이때쯤

20) 이에 대해서는 가이다르 자신이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로비그룹과 최고회의에 돌렸다. Е.Г.Гайдар "новый курс", Россия и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N 3, 1994, с.63.

사회심리적으로도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체제와 정체성에 대한 반성적 비판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다.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유라시아문명론’의 인기가 한층 높아졌다.²¹⁾

임기중반에 접어든 었핀정권은 이같은 국내실정과 대중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이 시도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국내정치’의 연장으로서의 대외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93년 11월초에 ‘신군사독트린’이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고유한 국가이익이 존재하며 국내적으로는 스스로의 사회경제구성에 걸맞는 발전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같은 경향이 러시아대외정책의 결정적인 반(反)서구적인 방향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었핀은 1995년과 1996년에 연방회의(상원)에 보낸 교서에서 거듭 서방과의 우호관계를 실현, 유지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러시아의 대외정치적, 대외경제적 입지의 강화는 반드시 경제개혁을 포함한 ‘굳건한 민주적 발전’의 길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국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호의적인 대외적 조건의 형성은 러시아로서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93년말~1994년초를 기점으로 일

21) ‘유라시아론’과 ‘민족·애국세력’의 대외정책관에 대해서는 즐고,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 「한국과 국제정치」, 1996. (출간예정) 참조.

22)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

어난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초변화를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 온 ‘빠레스뜨로이까적 대외정책’의 종언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인류적 이해’라는 개념에 기초했던 고르바초프식의 낭만적 경향이 절정에 달했던 엘진 집권 초반기의 러시아 외교정책이 더 이상 대외적, 대내적 효과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의 ‘국가이익’ 개념을 재정의하고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실용주의 경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의 저하가 ‘러시아의 고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놓여 있었다. 1991년 이후 국제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방측이 NATO 확장에서 러시아측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의 서방측의 행동들, 러시아 - 인도간 미사일거래의 봉쇄와 이란에서의 원전건설에 대한 취소압력, 서방측이 제공한 원조의 양과 결과에 대한 실망, 각종 국제기구, 즉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 와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의 참가 방해 등등.²³⁾

그 결과 러시아는 일방적인 서구지향적인 외교정책으로부터 전통적인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자주·독자노선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지정학적 이해에 기초했던 쏘비에뜨 시기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3) A.Zhebin, "Russia and Korea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19, No.2(Fall-Winter 1995) pp.175-176.

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양자가 다른 점은 후자가 매우 여러번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로 인해 자국의 이해관계가 희생되었던데 반해, 전자는 취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국익’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했는가? 그것은 1996년 6월 옐친대통령이 연방회의에 보낸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먼저 대외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 보면 세계적 수준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적 중요성과 군사·정치적, 대외·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관계 체계의 형성에 적극적이고도 충분한 권리를 갖고 참여한다는 것; 지역적 수준에서는 안정되고 안전한 국제환경의 보장, 세계무대에서 지역적 협력의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기초위에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확보,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지적 수준에서는 신생 독립국가들과 모든 방면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과정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외부적 요인은 옛소련지역에서의 통제되지 않는 해체과정이다. 각 공화국 정치지도자들의 지역분리주의와 민족주의적 호소로 가속화된 이같은 부정적 경향은 옛소련국가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분쟁을 일으켰으며 거기에 살고있는 러시아인들의 지위는 물론 러시아 자체의 안정적 발전에 직접적인 위협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대외적인 위협요인은 “러시아의 주권과 통

24) 이에 대해서는 V.P.Tkachenko, "Lessons of pueblo crisi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v, no.2(Winter 1993) 참조.

25)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

합성, 옛 소련국가들과의 연계를 저해하고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그 동맹들”이다. 여기에서 NATO의 동진(東進)이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군사분야에서의 외부적 위협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인접지역’에서의 군사분쟁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나 특정국가(군)가 세계적 수준에서건 개별적인 지역적 수준에서건 군사·정치적으로 패권을 행사하려는 시도 또한 위협요인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접지역’에는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개념위에서 러시아대외정책의 기조는 우선적으로 옛소련지역에서의 상황의 안정화, 그 다음 미국 및 유럽과의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의 발전,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인 동반자관계’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중·동부 유럽국가들과의 호혜적인 쌍무관계의 발전, 남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의 확대 등이 추가된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집단안보체제의 형성 및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평화유지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만약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원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또한 미국의 패권체계를 용인할 의사가 없다. 러시아는 “남한과는 동반자적 관계, 북한과는 선린적 관계”²⁶⁾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반도의 두 국가에 대해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러시아는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26)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МИД РФ, N 21-22. ноябрь. 1994. с.64.

확보, 행사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간주하며, 그같은 이유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강화하면서 군사·정치적 측면에서의 관계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남한에 대해서도, 비록 지난번 한반도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 경제협력관계에서의 실망, 4자회담제안에서의 초청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초기와 같은 일방적 접근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군사분야에서의 관계 또한 계속 유지, 또는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시기 이래 지나치게 친남한 쪽으로 경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경험, 한반도 통일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점증하는 중국요인 등으로 인해 러시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²⁷⁾

결국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치, 군사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Ⅲ.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방식

- ‘4자회담’과 ‘다자간국제회의’ 구상

변화된 러시아대외정책의 기초를 반영하여 올초 새로 외무장관에 취임한 예브게니 뿌리마코프는 러시아외교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들로서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의 강화를 위한 유리한 대외적

27) 이러한 측면에 대한 훌륭한 설명으로는 A. Zhebin, op. cit. 의 논문 pp.180-186.

조건의 창출, 지역적 분쟁의 해결, 항상적 긴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익한 정부간 관계의 발전 등을 제시했다. 28) 현재 주 북한대사로 있는 발레리 데니쑨프가 최근 지적했듯이, 이러한 외교적 과제들의 해결에서 '한반도상황의 정상화'는 중요한 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측은 극동 국경지대에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이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며, 또 그것은 향후 통일 한국과의 선린관계를 보증할 것으로 믿고 있다.29)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급진적인 상황타파의 방식이 아니라 굳건한 평화와 안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방식의 도달점으로서, 즉 건설한 남북대화과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화해·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진보'30)가 긴요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한 러시아측의 접근은 첫째로 38선 양쪽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과 지침에 대해 합의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주변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과정을 보증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입장에서 러시아는 지난 '92년

28)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МИД РФ. N 2, февраль, 1996. с.3.

29) V.I.Denisov,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 unification",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yungnam Univ. on Korea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p.2.

30) ibid., p.1.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 지난 4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선언과 잇달은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1953년의 정전협정에 대해 러시아측은 그것이 비록 낡은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평화유지 메커니즘이 창출될 때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와 바로 이같은 평화유지 메커니즘의 문제가 ‘긴급한’ 것이 되었다고 보는 러시아는 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해체하려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쌍방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를 상실케 하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정치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것이라고 러시아측은 판단한 것이다.³¹⁾

한반도문제의 해결에서 우선적으로 당사자 원칙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보다는 남한정부의 입장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과 직접 접촉을 통한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북한측의 입장에 대해 러시아가 취하는 비판적인 태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렇다고 하여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남한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변 관련국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다자간 합의과정, 즉 한반도문제에 대한 ‘모든 관련당사자들이 어떤 특권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제적인 다

31) *ibid.* p.10.

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4년 3월 북핵문제가 고조되어 있을 때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와 비핵화 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미, 러, 중, 일, UN, IAEA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제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주지하듯이 이들 제안은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정부 또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회담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노태우정권당시 6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의한 바 있었다.³²⁾ 그리고 지난 94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제안했으며, 올해 5월 공로명 외무장관이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러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이를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양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

그러나 '국제적인 다자회담'에 대한 한·러 양국의 의견상의 '일치'는 아직 외교상의 에피소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한·미 공조'와 '중국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러시아를 회담 당사자에서 제외시켰고 러시아는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그것은 한국측의 '제한적 다자회담' 입장과 러시아측의 '포괄적 다자회담'의 입장의 충돌이었다. 물론 양자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장벽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측은 '4자회담'을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대화로 가는 출발점 또는 중간다

32) 한겨레신문, 1996. 4. 25.

33) 동아일보, 1996. 5. 7.

리로 간주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직접 대화와 미·중 양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의 초청자명단에서 러시아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러시아측의 반응은 “당혹스럽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치부하려는 것이었다.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무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4자회담에서의 배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판단은 그것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전의 공고화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방지체제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폄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³⁴⁾

알렉산드로 빠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은 (한·미 제주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4월 15일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핵문제를 정전체제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핵문제가 북한과 미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처리되었으나 곧이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문제를 그같은 양자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³⁵⁾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미, 러, 일, 중이 모두 한반도의 분단과 분쟁의 직간접적인 당사자

34) V.I.Denisov, op. cit., p.10.

35) 문화일보, 1996. 4. 16.

인데다 한반도의 안정이 이들 국가의 안보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그러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것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러시아쪽(정부관리 또는 학자들)의 그동안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첫째, 모스크바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역사적으로 미·소가 주도한 얄타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북한체제의 수립과정과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소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러시아의 주장은 쉽게 부인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리적으로 볼 때 러시아연방은 실제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이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본대로 인접한 국경지대에서의 분쟁의 발생가능성이나 또는 남북한의 통일, 북한체제의 붕괴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적으로 볼 때 옛소련의 국제법적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 나토의 동유럽으로의 확장,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 미, 일 동맹체제의 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같은 국제적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미 지난 4월 엘친의 북경방문시 공동성명을 통해 “중·러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선언³⁶⁾한 러시아로서는 한반도문제 해결

에서의 배제가 자신들의 그같은 약화된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계속 악화되어왔던 러·북 관계를 최근에 상당히 개선해나가고 있는 움직임이나 경제분야는 물론 군사분야에서까지 남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일정한 영향력을 회복·유지하려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전략적 목표는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축에 있다. ‘국제적인 다자회담’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 러시아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위협 감소를 통한 정세안정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및 중국의 안보역할 증대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는 부분적 갈등관계를 수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수용하는 타협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실제로 게오르기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는 4자회담제안 이후 러시아는 북·미관계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³⁷⁾, 러시아외무성 관리인 발렌진 모이세예프도 다자간국제회의의 첫단계로서 북·미간의 전쟁 및 군사충돌방지 등을 포함한 한반도안보 구조의 윤곽 작성을 위한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³⁸⁾

36) 조선일보, 1996. 4. 26.

37) 한겨레신문, 1996. 4. 25.

38) Valentin I. Moiseyev, "Regional States' Policies on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n Position and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전체적으로 볼 때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처럼 부정적이다. 그것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제안자체에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초청되지 못한 이웃’으로서의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 확대하려는, 경제·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엘리트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방적인 친서방주의 외교정책 경향을 탈피하여 전통적인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러시아의 ‘고유한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독자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접국가’의 범위에 드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닌 무대로서 주목되게 되었다.

둘째, ‘인접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의 구축은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다. 러시아의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분쟁의 발생이나 급격한 현상타파는 바람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Regional Powers”, 20-21 November 1995,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p.13-14.

직스럽지 못하다. 때문에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두 개의 주권국가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그것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러시아에 적대되지 않는 통일국가로 진전되는 사태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한 일련의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과 규칙들이 합의된 다음 그것을 국제적으로 검토·보증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한반도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국제협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미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은 러시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러시아측의 입장에 대해 남북한과 미, 중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4자회담 주도자 선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명분이나 설득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사실은 미국도 유엔을 대표해서 서명했을 뿐이다. 또한 국제적인 회담의 의제가 단순히 정전협정 자체에만 국한될 수 없고 결국은 전반적인 한반도의 분단체제의 관리 또는 해소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다자회담의 여러사례들을 검토해 볼 때도 관련당사자들 중 해당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행위자들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로 내년 3월께 열릴것으로 최근 보도된³⁹⁾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에 관한 7개국(남북한, 美, 러,

加, 中, 日) 국방장관회담은 이 지역 최초의 다자간안보협력체의 모색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시도가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고착화 시킬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9) 한겨레신문, 1996. 11. 18, 동아일보, 같은 날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

최영관

(전남대학교 교수)

< 목 차 >

- I. 서론
- 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
- III.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
- IV.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 모색
- V.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탈냉전 이후 미·러관계가 완화되면서 한국이 러시아·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미·일과 상호 접촉을 진행해 감에 따라 동북아의 긴장완화 추세가 가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질서

의 다극화와 역내 국가간 경제적 의존도가 급격히 향상되므로써 지역안보협력 환경에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중·러간에 이해관계의 갈등의 폭이 크고 중국과 한반도가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 역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동북아 질서는 협력의 요구와 갈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2중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무시하고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1994년 제네바에서 합의된 「북·미 핵 협정」체결 후 북한은 停戰協定 死文化戰略을 쓰면서 군사정전위로부터 북한군을 철수시켰으며 이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임의 설치, 중국·체코·폴란드 등의 중립국감시위원단 대표 축출, DMZ유지 및 관리임무 포기선언, DMZ 및 서해해역 경계선 무단 침범 등 수많은 군사정전협정 위반을 자행하였다. 지난 달에는 강원도 속초에 무장잠수함을 침투시켜 간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급기야 11월 20일에는 일방적으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설치된 '판문점 연락 사무소'까지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오직 대미평화협정체결 목표에만 집착하여 정전협정을 사문화하고 남한을 배제하여 대미 직접협상만을 노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남북당사자

간의 협상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써, 지난 4월 한·미정상
은 제주회담에서 「4자회담」을 새롭게 제의하였다. 이는 남·북한간
의 평화체제구축이 미·중으로 하여금 보장받는 형식의 국제적 보
장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폭넓은 논의를 기대하고 제의한 것이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검토중이라는 보도만 있을 뿐 「4자회
담」에 대한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제에 본 연구는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구
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재정리해 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적인 평화구축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연구하고 제안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첫째 평화체제의 기본적 의미와 현실
적 단계로서, 여기서는 주로 평화체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남북한간의 기본입장은 어떠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화체
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평화
체제를 위해 제의된 4자회담에 관한 부분으로 4자회담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평화체제에 주
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제안에 대해 갖는 남북한의 입장은 어
떠한 것인가를 분석한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방안으로써 평화구축
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정책대안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찾아 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끝으로 4자회담을 중심
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구축 대안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것이어

야 할 것인가 하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

1. 남한의 입장에서 본 평화체제

1970년대 이후 남한의 일관된 통일관은 통일을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통일정책의 기초를 「先平和定着 後統一」로 삼고 있다. 즉, 남한은 현실주의론에 입각해서 일단 남북한을 ‘분단국가’로 보고 그 분단의 배경이나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민족사회가 현실적으로 두쪽이 나있고, 지배영역과 주민을 가진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1민족 2체제론’적 기초 위에서 통일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먼저 남북한 간에 불신과 반목을 제거하고 불가침을 약속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간에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각각의 사회를 개방해가면서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그 토대 위에서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을 달성해 나아간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방법상 기저는 기능주의적 혹은 신기능주의적인 틀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에 기초하는 민족통일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한 민족동질성 회복은 교류·협력과 함께 통일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40) 이흥구,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박영사, 1984), p.165.

시도하고 나아가 정치·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협력해 나아갈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남한이 통일해결방안을 점진적·단계적 접근법을 시도하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통일이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무리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고 민족적 숙원이라고 해도 민족을 멸망시키는 통일이라면 의미가 없다. 통일은 결국 7천만 민족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것이지 민족의 쇠락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당연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의 시작은 당사자간의 대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 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고서 통일을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평화적 통일과정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평화분위기 보장을 제도적으로 장치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바라는 평화체제구축 구상은 단순한 전쟁억지나 양체제 간의 단순한 협약이나 조약 등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평화를 창출하고 정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며 현실적인 평화체제구축방안이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제도화되고 실천되도록 하는 평화체제구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삼고 있다.

2.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관은 「先革命 後統一」 전략이다. 조선노동당규약은 당의 최종목적을 “조선노동당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남조선 혁명'과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당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先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전제로 하고 이 토대 위에서 남한의 인민정권과 북한의 정권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통일관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통일관은 '남조선 혁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혁명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단계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혁명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사실상 '남조선혁명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남조선의 혁명을 위해서는 한국의 현체제를 타파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을 규합하여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달성하려는 기본계획으로 되어있다고 분석된다. 물론 1990년대 들어와 통일전략에 대한 전술상의 변화가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나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된다.

이상과 같은 통일관을 토대로 북한은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 체결'을 주장해왔는데 북한이 '평화협정체결'을 처음 제기한 것은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회의에서이다. 여기서 북한은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함께 주장한 이래 1974년 3월에는 '대미평화협정'을 미국에 제의하였고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

차당대회에서는 ‘고려연방제’ 실시의 선결 조건으로써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북한임을 내세우고 양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하였다. 특히 1984년 1월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석 회의에서 미국에 한·북·미 ‘3자회담’을 제의하였는데 여기서는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선언’을 병행 체결하자는 것으로서 미·북회담에 남한을 읊서버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평화안을 제의한 바도 있다. 더우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년 2. 19 발효) 이후부터는 남한정부를 철저히 배제시킨 가운데 미·북간의 포괄적 「평화보장체계」협정을 주장하는등 대체로 4단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주장되었는데 특히 포괄적 「평화보장체계」란 남북불가침 실천, 북·미평화협정 체결, 남북군비축소,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심은 실질적 당사자론에 입각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미 직접협상주장으로 북한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핵협정’ 체결 이후 더욱 강도 높게 남한정부 배제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서 한반도의 해당 당사국인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채 북·미간평화체결만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의 저의를 분석해보면 순수한 민족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현실성있게 남북한 민족의 대통합이나 조국통일을 위한 조건으로써의 평화체제구축이 아니라 북한 자신의 체제유지전략, 聯美對南戰略,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그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기본적 의도에 따라 전술적으로 평화체제를

제의·주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제의한 평화체제란 그 기본입장이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는 오직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남한 배제전략으로 집약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停戰協定 死文化戰略과 미·북 직접협상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첫째 정전기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성하면서 미국과의 평화체제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둘째 정전협정파괴의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면서 오직 미국만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여 미국과의 고위군사회담 내지 장성급 접촉을 직접 시도하고 있고, 넷째 미군유해반환 문제를 위한 미·북직접군사접촉을 정례화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Ⅲ.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1. 4자회담의 배경과 내용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남북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남북한 양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평화체제 전환시까지의 현 정전

협정을 엄히 준수해야 하며 이미 남북한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남북이 상호 신뢰구축에 바탕하여 상향적방식(Botton-up)으로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접근방법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 후 북·미 관계가 남한을 배제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더욱 일방적인 대미 접근공세를 펴면서 동시에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므로써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지않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탈냉전추세가 점차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실용적 제안이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요구와 대응전략의 배경에 따라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한·미정상은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이 회담의 성격은 예비회담적 성격의 「4+2회담」으로서 남북이 회담의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추진하는 「2+2」 회담형식의 회담방식과 4자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4자회담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첫단계에서는 4자회담을 통해 4개국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한 다음 남북한이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실질적 의미의 「4+2」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원칙에 의해 협의를 하면서도 한반도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 주요내용은 한·미정상은 먼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미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첫째 한반도평화문제와 북·미양자간 교섭문제를 분리하며,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아니하며, 셋째 미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제주 3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의 4자회담이 갖는 의의를 찾는다면 일단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책동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한·미양국이 한반도평화문제와 미·북관계 개선을 분리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고 동시에 대북정책과 관련하는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지금까지 「4자회담」에 대하여 북한은 공식적인 수용의사나 공개적인 거부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면 첫째, 「4자회담」이 북·미접근을 막고 남한 주도의 평화체제구축 회담이라는 점과 북한이 회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남한배제 전략’을 수정해야하는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대미 핵 협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남한 배제와 미국과의 직접협상 전략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핵사찰 문제는 근본적으로 IAEA와의 문제이지만 북한은 IAEA와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이루워냈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핵확산 금지전략이 북한의 요구와 맞아 떨어져 북·미 직접협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제네바 협의는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한반도 안전을 위한 평화의 사도로 자리를 바꾸게 하였고 남한을 민족공동평화에 대한 主敵으로 전환시켜놓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기존의 노선에 태도변화가 없는 한 4자회담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기타 현안 문제와의 분리해결 원칙이다. 이른바 제주3원칙에 의하여 북한은 평화체제문제가 아닌 경제원조의 문제, 미사일문제 등 현안 문제를 그것과 분리하여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고도 미국과 직접 회담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4자회담에 한국과 중국이 회담당사자로 들어오는데 대한 북한의 불만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정전협정 서명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의 협정체결로 계속 주장해왔는데 이제 4자회담으로 회담 당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본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측 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였을 때도 크게 반발 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유명무실을 공언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증강과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안전을 담보할 평화보장체제를 미국에게 강하게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후 군사정전위로부터 중국, 체코, 폴란드 등의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렇듯 군사정전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으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이 회담 당사자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넷째 탈냉전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한 끌어안기’ 또는 ‘북한 살리기’ 정책과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영향력 확대가 4자회담을 선뜻 받아드리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여진다. 결국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으면서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남한을 주적(主敵)으로 하여 내부 결속을 통한 위기관리와 대미·일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극복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여기에도 몇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 4자회담을 즉각 거부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불이익이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실리적인 판단일 것이며, 둘째 4자회담을 역이용하여 몇가지 조건을 덧붙여 역제의를 함으로써 한·미 양국으로부터 양보나 지원을 획득하고 이에 따르는 한·미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하여 미국측에 사전 설명회를 은근히 제의하면서 실리를 챙기려 한다든가 최근 미사일 관련 기술문제와 유해반환 문제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대가를 요구해온 사례 등이 4자회담을 즉각 거부하지 아니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도, 북한은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제조건을 요구하거나 변형된 회담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남한과 중국은 옵서버 역할을 하는 회담으로 변질시키면서 미국과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고 남한과는 불가침합의 이행 문제만을 논의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서 미·북평화협정이 한국의 이해를 유도하게 되면 주한 미군을 인정하는 흥정거리도 상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팀스피리트(T/S) 폐지, 한미연합사의 기능 약화 등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의할 개연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결국 4자회담 제의의 본 뜻은 북한의 남한 배제전략을 저지하고 당사자 해결원칙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전에 직접적 개입국가인 중국과 미국을 참여시켜 남북당사자간의 평화협정체결 과정과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차선의 선택으로 4자회담이 제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IV.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정책모색

1. 평화체제구축의 기본원칙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은 줄곧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당사국간의 평화체제 논의와 그 협정이 정당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1953년 체결된 한반도의 휴전(armistice)협정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적대세력 쌍방간에 停戰(truce)을 합의한 것이지 그 외의 어떠한 문제, 예컨대, 한반도 평화나 통일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즉, 휴전협정 전문은 동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을 갖는 협정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더우기 제60항에서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치문제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을 규정하고 있어 휴전협정 자체가 새로운 협정에 의해 대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본질상 전쟁의 종료가 아니고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의 군사적 협정에 불과하므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의 과정과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이상과 같은 인식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당사자해결원칙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 모든 사안은 민족자결원칙과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논의하고 합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는 남북 공히 한반도통일을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접근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였든가 마침내 1975년 남북한 통일방안이 모두 유엔 무대에서 지지를 받는 웃지 못할 경험을 얻고서야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 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의 투자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얻어냈는가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지 남북당사자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만 한다.

둘째, 남북간 기존에 합의된 사항의 존중원칙이다. 즉, 이미 남북한은 당사자해결원칙과 남북문제의 민족내부문제화라는 대원칙에 의해서 많은 노력 끝에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

선언 등 여러가지 합의사안 등이 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보장이 없이 평화체제를 포함한 모든 통일과정이 기존의합의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틀에 따라 기초하여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모든 합의가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헛수고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화정착과 통일실현의 노력과 과정은 남북한의 총리가 정부당국 차원에서 체결하고 엄숙히 민족 앞에 그 이행과 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합의인 기본합의서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합의서 이행 및 실천원칙'이 준수 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평화의 실효성 보장원칙이다. 한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주변 관련국들에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 설득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일의 대북 접촉시 남북평화체결을 강조하도록 요청하고 중·러의 대북한 설득과 압력 행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획득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토대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물론 평화체제구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정치군사적 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즉, 기체결된 조약의 존중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된 기존의 동맹조약과 기타의 선린 우호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합의서 제5조와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 등의 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이 기간 동안

정전협정은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체제구축 추진방법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추진방법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한다. 즉, ‘先 평화체제기반 조성, 後 평화체제구축’의 단계적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분위기가 완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간의 평화상태가 회복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정치·군사적 신뢰를 더욱 공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그것은 ‘선 평화협정 후 평화체제구축’을 의미하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존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욱이 ‘4자회담’들 속에서의 ‘선 평화체결’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도 되기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 유엔사나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철수등 현안문제를 문제삼음으로써 오히려 불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방법은 통일정책과 연계시켜 평화통일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하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이라는 단계적 통일 구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의 원칙에 따른 단계적 추진 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 그 단계는 첫째, 정전체제 유지원칙이다. 북한은 현재 할 수만 있으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미국과의 직접 단독 평화체제협정

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위반으로서 한국정부는 이를 엄중 항의하고 정전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북한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평화상태를 이룩하기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이는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하여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과 '평화체제 전환시까지의 정전협정의 유지와 준수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즉, 남북간에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룩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시도는 법이론적으로도 평화체제체결은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전체제를 파괴하고 위반하는 토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정전체제를 사문화한 채 또 다른 평화체제협정이 이룩된다면 그러한 협정이 무엇이든 또 그 내용이 어떠하든 그 협정의 실행이나 실효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까지는 정전협정의 유지와 준수'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원칙이다. 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협의기구(분과위 및 공동위)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의 부속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간 군비통제를 합의,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 구축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조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우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불가침선언’이 이룩되었으므로 이제는 북·미간에 평화체제만 체결하면 된다는 것으로, 평화협정은 대미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한반도의 군비문제는 남북간의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활용, 남북 간에 먼저 군비통제협상을 제의하여 평화체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도 있다. 물론 군비통제는 ‘신신뢰구축, 후 군축’의 기존 방침을 견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군축협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더 나아가 한·중, 북·미 교차불가침협정의 체결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평화체제체결 분위기에 따라 중간조치로써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을 교차협정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안정화할 수도 있다. 이것은 관련국들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미 평화체제체결 공세를 우회하면서 기본합의서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또 중국에게는 북한의 일방적인 군정 위의 철수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원칙 아래서 최종단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 추구를 이루는 것이다. 제1, 2추진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남북간에 실질적인 평화적 신뢰와 교류·협력관계가 가시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4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미·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제적 보장노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경우이든 기본합의서의 준수와 이행원칙 하에서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

한반도의 문제가 처음부터 국제성을 내포하는 문제라고 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 관련국가들의 사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 역시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에는, 첫째 미국에 의한 보장(2+1), 둘째 미·중에 의한 보장방안(2+2), 셋째 한반도 주변 4국에 의한 보장방안(2+2), 넷째 한국참전 16개국 및 중·러에 의한 보장방안, 다섯째 동북아 안보협약체제에 의한 보장방안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셋째 방안에 대하여만 논의하려 한다. 우선 이 방안에 대한 몇가지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먼저 장점을 들면 첫째, 「2+4」 방식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러를 한반도 평화 보장자로서 포함 시킴으로써 미·중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 공헌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2+4」 방안은 보장국들 가운데 특정 쌍무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도 여타국가가 한반도분쟁을 조정,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남북한간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정, 중재가 「2+2」방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2+4」 방식은 모든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역내국가들은 「2+4」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

북아 지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역내 군축문제를 다루는 지역적 집단 안보기구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단점도 있다. 즉, 첫째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해 주변4국의 개입을 인정,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가 무너질 수 있다. 「2+4」방식은 결국 주변국들의 한반도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므로 한반도에 대해 주변국의 개입을 합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2+4」방식은 한반도 평화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외세개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약점이 있다. 셋째, 한국은 주변4국을 상대로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얻기 위해 외교적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책 개발과 대응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오늘의 동북아 현실은 한편으로는 역내국가들간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 지역협력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중핵으로 하는 미·러·일·중간에 국가이익을 위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말하자면, 협력의 욕구와 갈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2중적 질서 속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고 통일을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느 누구도 평

화적 통일과정을 보장할 수가 없다. 여기에 통일의 중간 단계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요청된다. 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남북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북은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남한을 배제한 반민족적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정상은 「4자회담」을 제의하여 평화체제협의를 위한 남북당사자의 실질적 협의를 유도하고 중·미가 보장하는 형식의 평화체제협의 방식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 왜 평화체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의방법은 당사자해결원칙과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남한이 이미 제의한 「4자회담」은 이러한 기본원칙이 북한에 의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대안이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배울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역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은 기존합의서를 토대로 기본적인 원칙을 상호 준수하면서 「2+4」 방식의 평화체제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있는 정책대안일 것이라는 진단을 결론으로 삼으려 한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김 국 신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 I. 서 론
- II.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이행 태도
- III.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 IV. 남북한 관계개선의 조건
- V.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전망
- VI. 결 론

I. 서 론

1989년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0년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은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 지도층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1991년말 소련 붕괴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개방·개혁 정책을 실시한 소련과 중국의 원조감소 및 교역 상대국인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의 몰락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북한은 경제난 해결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이가 심해짐에 따라 평화공존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지도층은 남한의 고위급회담 개최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1990년 9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후 남북한 대표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협상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991년 12월 31일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북한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직후인 1991년 12월 28일 두만강 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나진·선봉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남북한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북한의 경제정책은 북한도 중국식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북한이 개방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가 실행단계로 진입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이 지금까지의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평화공존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1992년 12월 개최하기로 약속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무산되었고, 그후 남북한 관계는 다시 냉각상태로 빠져들어 현재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자 미국은 북한과 1993년 6월부터 고위급 회담을 개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북·미기본합의문의 주요 요지는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며,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의 인도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2천MW급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대북한 무역 및 투자제한 조치의 일부를 해제한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네바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의 기본태도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과 미국측의 입장이 고찰되었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들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합의에 입각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전망되었다.

II.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이행 태도

1. 북한의 태도

북한은 북·미협상 타결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제네바 합의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5년 신년사 대신에 발표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신문·로동청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은 북·미

기본합의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4년은 북한의 대외적 권위가 크게 높아진 해이고 역사적인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둔 해이다. 이것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획기적인 거사이다.” 이같이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안보·외교 역량을 강화하며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북한측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1월 20일 미국이 취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데 실망하였고, 1월~2월 사이 공화당 주도의 미국 의회가 제출한 대북결의안을 보고 더욱 곤혹감을 느꼈다. 미국 의회는 상호 연락사무소 수준 이상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인권문제, 재래식 군사력 감축, 미사일 수출 포기 등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9월 19일부터 8일간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만난 카네기평화재단의 해리슨(Selig S. Harrison) 수석연구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북한은 핵동결 등의 약속을 지키는데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⁴¹⁾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외교관들도 북한은 핵동결을 유지하고 폐연료봉 안

41)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Selig S. Harrison, The US-DPRK Nuclear Agreement and the US-ROK Alliance: View from Pyongyang,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S-ROK Alliance 1995. 10. 5~7), pp. 1~6.

전처리 등 북한측의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였는데 미국이 취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제네바 합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중유공급 정도였을 뿐 별개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내용은 특별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시점 이전까지 북한으로서 특별한 부담감이 없는 반면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고 있는 바, 북한은 최소한 특별사찰 시점까지는 제네바 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12월 15일 북한은 KEDO와 경수로 공급협상을 타결지었다. 이 협상에서 경수로 공급범위 등 여타 난관들을 해결함으로써 경수로 부지 조사 등 본격적인 경수로 설계작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이 KEDO와의 경수로 협상을 예상보다 빨리 타결지은 것은 경수로 문제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장애가 되거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건 사실 북한은 10년 뒤에나 완공될 경수로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정작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경수로가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원하는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기구들을

42) 김종환, “남북협상전문가 이동복씨: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월간조선』 (1995년 5월), pp. 389~390 참조.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진행한 미국과의 회담을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⁴³⁾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며 진행시켜온 경수로 협상과는 달리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군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 및 정통성 문제와 맞물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1995년초부터 미국이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중간단계 조치를 고려해도 좋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해리슨(Selig S. Harrison)은 북한이 종전의 경화된 자세를 완화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신 북·미간에 상호안보협의위원회를 가동시키고, 동시에 이 위원회의 가동준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상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어려울 것인 바,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양해하는 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⁴⁴⁾ 해리슨의 메시지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정전체제의 평화체

43) 조갑제, “대북협상의 제1인자 이동복 증언: 거대한 파충류 같은 김일성, 그의 사전에 핵포기는 없다,” 『월간조선』 (1994년 4월), pp. 103~133 참조.

44)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Selig S. Harrison, *The US-DPRK Nuclear Agreement and the US-ROK Alliance: View from Pyongyang*, pp. 1~6.

제로의 전환에 관한 북한측의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한국과 미국측이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2~3년 후 경제난이 가중되어 군비 증강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 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하고 오히려 남북한 군축에 관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준전시체제 하에서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현 지도층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별로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2. 미국의 태도

제네바 합의 직후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이 북·미협상에서 북한만이 실익을 취했다고 비판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부품이 북한에 제공되기 이전에 북한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이들의 비판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붕괴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게 되자, 국무부 직원들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동북아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경수로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제네바 합의를 정당화하고 있다.⁴⁵⁾ 이같이 미국무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연착륙

45) Larry A. Niksch, The Agreed Framework: View from Washington,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S-ROK Alliance 1995. 10. 5~7), pp. 8~10.

(soft-landing)시킨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내부정세나 합의 이행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의 합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의회와 타협을 모색하면서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무부는 1995년 1월 20일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었다. 미국이 실질적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대북협상에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제재완화의 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하였지만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북·미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1995년 7~8월의 수재로 유엔과 서방 각국에 구호의 손길을 내밀자, 국무부는 수교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재해지역에 2만5천달러까지의 긴급구호금을 방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북한에 대해 식량 등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로 북한측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적·

46) 「세계일보」 1995년 9월 13일자 참조.

법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이유로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1월 24~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회담 직후 한국측은 당분간 정부차원의 대규모 쌀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으나, 1월 31일 미국은 대외재난구호기금(FDA)을 재원으로 해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였다.⁴⁷⁾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한결 같다.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현단계에서 감축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은 북한측의 북·미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 대화채널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부는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 판문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군사정전체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 및 우발사태 방지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47) 미국은 미 공법 480에 입각한 2백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재난기금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1996년 1월 10~12일 미국과 북한은 하와이에서 미군 유해송환 협상을 개시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등 협상 수위를 정치차원으로 높이려 하였으나 미국측은 협상안건을 미군 유해문제에 한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북한측의 협상전략을 차단하였다. 1996년 2월 22일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 상태에서 북·미 군사당국자간 협상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보다는 이를 적절한 협상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측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을 제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후 미국은 북한측에 4자 회담을 수용할 것을 계속 설득해 오고 있다.

Ⅲ.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1. 북한의 기본입장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과 남북대화는 별개라고 주장하

48) 북한의 비무장지대 활동으로 휴전선의 긴장이 고조되자 게리 럭(Gary E. Luck) 주한미군사령관은 1995년 5월 12일 이양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군 소장이 한국군 준장과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측 장성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후 주한미군사령관은 1995년 11월 한국 국방장관에게 북한과의 군사접촉에 미군측의 재량권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고 있다.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 요구에 대해 북한은 KEDO내 한국대표단과의 회의를 남북대화로 간주한다며 미국측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전 월 평균 20~50회에 머물렀던 대남 비방 방송 횟수가 사망후에는 평균 150회로, 1995년초부터는 평균 170회로 급증하였다.⁴⁹⁾ 북한이 대남 비방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비난해 온 ‘미제국주의자와 일본반동’ 등과의 관계개선이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한을 새로운 주적으로 설정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한 고육책에서 남한과 1995년 6~9월 사이 3차례 쌀협상을 개최하고 남한 쌀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보수·강경세력은 대북 쌀지원과정에서 인공기 게양사건,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우성호 송환 약속 불이행 등의 사건을 돌출시켜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욱 경색시켰다. 그후 북한 군부는 1996년 4월 4일 비무장지대 무효화 선언을 하는 한편, 4월 5~7일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자행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돌발시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군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앞으로 서방국가들에 대한 경제개방이 임박할수록 적화통일을 더욱 강조하며 주민들의 내부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 하며 상당기

49) 「세계일보」 1995년 4월 1일자 참조.

간 남한 배제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가 제네바 합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향후 약 5년 후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사찰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리고 평화협정은 남북한 당사자가 체결하여야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만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남북대화, 특별사찰, 남북한 평화협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2. 미국의 기본입장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개의 축이 조화·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 노선이다. 미국무부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상호 핵사찰, 남북 합동 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문 이행을 위한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측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50) 최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열 공사도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20일자 참조.

즉 미의회는 남북대화 재개, 비핵화선언 이행의 진전, 북한 군사력 감축 등의 진전이 없을 경우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관계 격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⁵¹⁾ 클린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도 가급적 공화당 주도 의회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북한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실질적으로 별로 취하지 않았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경직된 연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이 미국이 한국측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대북관계를 보다 융통성있게 진전시키기를 원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6년 4월 16일 정상회담에서 ①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는 분리하여, ②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며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③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로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이외의 사항에 관해 대북접근의 자율성을 확대했지만 북한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남북관계 진전을 무시한 상태에서 북·미관계 개선만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51) 「조선일보」, 1995년 10월 6일자 참조.

IV. 남북한 관계개선의 조건

남한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는 일단 북·미 기본합의문의 구도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국력차와 북한체제의 변화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는 현실적으로 남한측의 주도하에 개선되어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한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 등의 3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의 변화과정은 단순히 직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북한체제가 내부적 모순에 의해 급격히 몰락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이와 같은 3단계의 변화를 거쳐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평화공존과 안전보장, 남북한 공동이익의 확대, 북한체제의 변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체제공존과 안전보장

자신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과 협력관계에 임하지 않는 것이 이념적으로 대치된 동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52) 더욱이 군사적으로 침여하게 대립된 남북한 관계에서 체제의

52) 조용남, “통일의 전단계로서 안보공동체 형성논의: 서독 사민당 제2의 동방

존립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남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층이 체제생존과 안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⁵³⁾ 현재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화로 군사적 지원과 핵우산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안보문제의 핵심이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 또는 남한측의 무력도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미관계가 개선되면 군사적 차원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통하여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여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은 핵협상을 통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대미·대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들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이들의 지원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특히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정책 내용검토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민족통일의 모색」(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119 참조.

53) Abraham Maslow의 동기화 이론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생존과 안보에 대한 욕구충족이 남북연합 형성의 필수조건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Lee, Hun Kyung, North-South Korean Reunification Policies (1988-1991), Options and Model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92) 참조.

40~100억달러 정도의 전후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게 되고 기타 선진국들과 경제협력을 증대해가면 북한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경제적 차원의 체제생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협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게 될 것이지만, 남한경제의 우월성이 북한주민에게 알려지는 등 남북경협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북한은 남한과의 직접적 협력은 가능한한 억제할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개인소득은 남한 주민들의 1/10정도⁵⁴⁾에 해당하는데 북한이 경제 성장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1/2정도로 줄어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⁵⁵⁾

2. 남북한 공동이익의 확대

북한이 체제생존과 안보에 확신을 갖게 되면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북한당국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능주의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한 부문에서의 기능적 협력이 다른 부문으로 자동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때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제도화하여 남북연합

54) 1995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생산(GNP)은 북한보다 20배 정도로 크고, 1인당 GNP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1996), p. 8 참조.

55) 민족통일연구원, 「남북연합을 위한 기본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31 참조.

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현재 남북한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어렵고 지루한 협상 문제로 집약된다.⁵⁶⁾

남북간의 협상에는 민족통일이라는 큰 목표가 내재되어 있으나 남북한 지도층이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기 이전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개별적인 이익추구가 주된 목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익만을 협상의 주요 목표로 한다면 공동이익의 영역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크게 증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협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단순히 시장경제적인 효용성의 증대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있다. 남한에 흡수통합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협력이 주는 이익을 체제생존을 위한 안보증진 및 경제성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한측이 계산하는 이익은 남한의 경제·안보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군사비 절감과 국가안보의 증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도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생각할 때 통일이 되면 결국 그 비용의 대부분을 남한측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북한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남북한 문제를 민족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

56) 김종립,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통일전망: 일반협상이론의 시각,” 국토통일원, 「한반도 통일환경과 남북한 평화체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275 참조.

며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이익 영역을 확대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무한정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북한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없는 반면, 북한이 경제성장을 달성해 감에 따라 남한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의 효용은 체감될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익의 영역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급격히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여 연합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민족의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 지도층은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남한이 제시하는 민족의 공동이익이란 남한의 편향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며, 결국 남북연합이란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협상을 통하여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으려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얻는 공동이익의 영역이 평화공존 상태를 현상유지함으로써 얻는 공동이익의 영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북한측에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부문의 공동이익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 반면, 경제적 효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민족의 공동이익이란 인식하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화해·협력단계에서의 성립된 공동이익이란 그 속성상 남북한의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 바,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

을 인정하고 세계사적 조류인 자유민주주의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체제이념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남북한이 단순히 협상만을 반복하여 체제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3. 북한체제의 변화

남북한이 체제연합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측 지도층이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식하여 화해·협력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화해·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의 신념체계와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해야 한다.⁵⁷⁾ 남북한 지도층과 주민들간에 가치관이 어느 정도 동질화되지 못하면 남북한 관계는 국제시장에서의 호혜적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며 화해·협력관계가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 체제연합단계로 발전하기 불가능한 것이다.⁵⁸⁾

통합이론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를 넘어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체제의 변

57) 이상우 교수는 남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공존관계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남북한 체제의 상극성을 감안한다면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정치통일을 이룰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북한 체제간의 상용성(compatibility)을 높이지 않는 이상 남북연합은 형성·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서울: 나남, 1993), pp. 17~26, 59, 187~201 참조.

58) 김종립, “남북한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 58~63 참조.

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먼저 남한은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정의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남북한의 합의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체제가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냉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체제변화의 부담을 훨씬 더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폐쇄적 고립을 정당화하는 주체 사상을 버리고 최소한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여야 남북한간 체제연합이 가능하다. 즉 북한은 정당제도를 다당제로 개편하는 등 민주화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가격 자유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하여야 남북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나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변화는 북한에서도 조만간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체제와 지도층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남북한간 체제연합을 현시점에서 곧바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이 현시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해주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V.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전망

남북관계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 중 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시나리오는 ①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②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의한 독일식 흡수통일, ③ 북·미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한 평화공존 등 3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3가지 시나리오중 북한의 군사력, 북한정권의 사회통제력, 동북아 지역의 세력판도, 한·미 양국 및 주변강대국들의 대북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장기간 평화공존을 유지하며 한·미 동맹관계가 점진적으로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상정한 세번째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군사력에서도 점차 남한에 대한 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은 점차 실현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북한의 급격한 몰락에 의한 흡수통일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급격한 세력 변화를 원하지 않는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주변4국간의 상호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어 2+4회담을 통한 평화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실성이 떨어진다.

세번째 시나리오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미관계가 진행되더라도 그 전개과정에서 북한의 보수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남북한간 전쟁이 돌발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급격

히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체제를 개혁해 나간다면 북·미관계 및 남북한관계는 경수로 건설 진척상황에 맞추어 순조롭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973년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후 1979년 국교를 정상화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관계도 국교수립까지는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 시간표를 축으로 하여 국교를 수립할 때까지의 북·미관계 개선과정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⁹⁾

1. 제1단계: 연락사무소 개설 및 운영

1996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클린턴 2기 행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공화당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북한의 무력도발 및 잠수함 침투 사건 등으로 인해 야기된 한·미간 정책 갈등 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클린턴 2기 행정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국내문제 보다 대외문제에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클린턴 2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남북

59) 실제적인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는 북한의 내부정세, 미국 국내정치 사정, 남북한 관계 및 한·미 공조체제의 필요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양측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도발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남북한에 대해 균형잡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측에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꾸준히 설득할 것이나, 4자회담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진척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군 유해송환 협상 및 미사일 수출금지협상 등 북·미 군사접촉을 지속하며 북한군부와 대화채널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측이 잠수함 남파사건과 관련 한국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미국은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⁶⁰⁾를 실시하고 북·미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북한과 미국은 정부 차원 및 비정부 차원의 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제2단계: 경제교류의 점진적 증대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며 미사일 수출금지협상 등 군사 회담을 진행시킬 것이다. 북한측이 이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경

60) 미국이 실시하려는 제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① 미기업의 대북 직접투자 및 교역 허용 ② 미금융기관을 이용한 신용거래 및 대북송금규모 확대 ③ 미국내 북한자산동결 해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 미국무부는 교역 판매에 대한 수출입 은행 보증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을 상대로 국제금융기관들에 행사해 온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적성국 교역법 등 재무부 정책사항과 최혜국 대우·경제원조·일반특혜 관세 혜택 등 의회의 법개정이 필요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함에 따라 미·북간 교역량은 1998년까지 급격히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교류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증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구매력에 한도가 있는 반면,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면서 미국에 수출할 물품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북한이 무기금수체제인 미사일 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투자 및 금융지원에 관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 및 미사일 수출문제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남북대화에 임하게 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미간에는 경제교류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3. 제3단계: 특별사찰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

미국·일본 등과 경제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북한은 일단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99~2000년경에는 군사력 증강에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반면,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주요 핵심 부품 인도전에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실용주의 방향으로 정책전환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북한 내부 권력구조에 엄청난 폭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핵무기를 1~2개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이 순순히 핵사찰을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강경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특별사찰 수용을 거부한다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누적되어온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이 급격히 폭발하여 체제붕괴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의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북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미국의 투자가 증대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용도가 높아져 서방 각국에서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도 활발

해질 것이다.

4. 제4단계: 남북한 평화협정 및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이 과거 핵활동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폐연료봉을 제3국에 이전하기 시작하면, KEDO는 터빈발전기 등 원자력 발전의 핵심부품을 북한에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2003~2005년 사이에 경수로 1, 2기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북한은 잔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부터 경수로 1, 2기가 완공되는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며 북한과 대사급 관계수립을 위한 외무장관 회담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은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 단계에 미국·중국·남북한은 4자회담을 개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 등을 협상하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되면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북·미간 국교수립을 전후하여 일본도 북한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남북한은 명실상부한 4강의 교차승인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국교수립 직후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 협정, 무역협정 등을 조인하게 되고, 동시에 북한은 통상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받게 된다. 남북한은 이 때 북한 지역이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현상

을 피하기 위해 관세동맹을 추진해 가면서 남북연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VI. 결 론

남북한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대적 공존관계는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이 고립된 국제환경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체제생존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은 단순히 대화만을 통하여 진전될 수 없게 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된 현실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전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이 협상에 의해 민족내부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남북한이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지만 이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하게 되자 남북한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남북한 문제는 또다시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가 되지 못한 남한은 미국·일본과는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중국·러시아의 협조를 받는 등 국제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한반도 주변 4강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간 상호 관계의 유동성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장래의 불투명성 또한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남한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쌍무적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독자적으로 통일의 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한이 상호 안정보장을 통한 평화공존, 공동이익의 확대, 그리고 상호 인식과 체제의 변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북한체제 장래의 불확실성은 남북한의 장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북한내부에서의 돌발사태 발생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제1회의

사회: 박하일(전남대 교수)

발표: Selig S. Harrison(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김정일(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부소장)

토론: 이삼성(한림대 교수)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 해리슨 교수가 언급한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우리 학계와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미국이 장기정책(long-term policy)을 확립한 것도 아니고 연착륙정책(soft-landing policy)을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미국 정책은 일관성 못지 않게 내부의 갈등요소간에 긴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연착륙정책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1994년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4자회담 성사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리슨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제기를 하자면, 미국은 장기적 전망하에서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을 명백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왔는 바, 대북정책도 중국에 대한 포괄적 허용참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핵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강경책보다는 결국 일괄타결이라는 북한과의 협상을 택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탈냉전시대 아시아질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정치·외교적인 협조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에 대한 포괄적 허용참여 정책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은 하나의 방향감각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리슨은 4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게 핵동결의 댓가로 약속했던 경제제재 완화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점은 우리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연착륙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해리슨의 지적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미국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이라는 것이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북한체제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만들어 낼수 있는 틀이자 기회라고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미간의 양자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자회담이라는 틀을 가지고 북·미관계의 정상화 노력을 그 안에 묶어두려는 부정적 수단으로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자회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리슨이 지적했듯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동시에 한국정부가 4자회담이라는 것을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약하는 올가미로 사용하지 않으며, 북·미관계 정상화의 촉진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을 북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보다는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유념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보다도 경직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완화문제에 대해서 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로서, 결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내에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지하듯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은 미·일 군사동맹 유지·강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포용적 정책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10만병력의 지속 주둔인 바, 이것은 미·일동맹을 물리적으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중국과의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과의 군사동맹의 유지가 물리적인 군사적 주둔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과 일정하게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것과의 연계를 중요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최춘흠: 김경일 교수님은 중국이 4자회담에 관해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미국과의 근본적 갈등이 있는 한 중국이 미국을 적극 지원할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한간의 화해가 중국이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남북한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지 않고 북한과 미국간 가시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4자회담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화해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4자회담과 달리 적극성을 띠는 것은 오히려 정전협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에는 반기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나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관하여 중국과 북한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김교수님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북한과 군사·안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안보적 차원에서의 완충지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전종식 이후 한·미·일간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 자신의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통일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리슨: 이삼성 교수님은 미국이 대중 포괄적 허용정책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양국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중국은 붕괴하지 않지만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 입장은 한반도에 계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여론을 보고 제 자신이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여론은 무한정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본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일미군 특히, 지상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도 공군, 해군을 제외한 육군의 철수를 바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은 평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한국은 그것을 메꾸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것이고, 그러면 여론이나 한국의 정치가들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김경일: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은 남북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 중 하나는 평화공존 원칙을 북한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학자가 극단적 집단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북한체제를 지칭했다기 보다는 제반 사회주의의 실패원인을 언급한 것이지만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춘흠: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며 따라서 외교정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현재 당근정책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나 경제물량 등이 아직은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는 미약합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 현재로서는 당근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에서 보자면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회의

사회: 여인곤(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발표: Izumi Hajime(시즈오카대학 교수)

김창진(모스크바대학 정치학 박사)

토론: 최은봉(강원대 교수)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은봉: 일본은 한국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4자회담에서 체면을 손상볼 것이 없으며, 이 점이 바로 러시아와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3자관계가 아니라 2.5자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북한이 각각 1을 점하고 남한은 0.5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당사자 원칙을 중시하지만 3자관계 보다 4자관계로 하면 보다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그동안 3자관계를 통해 누리던 이익들을 침해당한다는 측면에서 4자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핵외교에 있어 이른바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획득한 경수로 및 중유의 지원

그리고 체제에 대한 보장 등을 보더라도 3자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접촉의 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4자회담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며 4자회담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경우 즉,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4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괄타결을 추구해왔습니다. 과거 청산, 국교정상화 문제의 동시타결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일괄타결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즈미 교수도 표면적으로는 대북관계에 있어 정경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팩키지 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협상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일본의 대북협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는 것이 있다면 지지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며, 4자회담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은 언제든지 4자회담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일관계의 구도가 일본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미·일간에 4자회담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즈미 교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북관계의 재개의 가능성은 확실해 보이는 바, 일본의 대북 창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의 대북창구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식: 먼저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인 태도에 비추어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특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leverage)가 별로 없다는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러시아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관망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진 박사님에 따르면 한반도는 러시아의 '인접국가'의 범위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와 한반도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접경국가의 의미는 아닌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 대외정책 용어를 보면, 가까운 외국(near abroad)과 먼 외국(far abroad)이 있는데 가까운 외국의 의미는 구소련국가를 지칭하는 것이지 여타의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 외교의 우선순위를 보면 구소련국가들이 최우선이고 두번째가 유럽이며 세번째가 아시아, 그 아시아도 동남아, 중동 등의 순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북아라 할지라도 한반도는 중국, 일본 다음이라서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책규정과 연관하여 '인접국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4자회담의 성사가능성과 관련하여, 4자회담이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은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끌어들여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4자회담은 동북아 다자협력이 아닌 외세의 개입을 최

소화하자는 의미에서의 발상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대체협정으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자회담이라는 제한적 다자회담과 러시아정부의 포괄적 다자회담이 충돌하였다는 김박사님의 언급은 너무 앞서간 느낌입니다. 4자회담을 다자안보체제와는 다른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정전체제 대체물의 성격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7개국 국방장관회의를 발표문 말미에서 거론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이즈미: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사회당이 창구를 담당하였는데,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고 98년에 있을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사회당이 대북한 교섭의 창구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이나 정치가가 담당하기도 힘들 것이라서 향후 일본의 대북관계는 정부대 정부간 교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자회담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일본의 참여와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을 언급하자면, 우선 대북개발 특히 북한의 나진, 선봉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제한 조건들 때문에 참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일본에 교역미지불금 약 8억\$를 지불하는 것이 일본의 북한개발 참여의 선결요건입니다. 향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전후 처리보상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북한개발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북교섭의 변화가능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앙케이트 조사

를 보면 일본 국민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50% 이상이 북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한 일본 국민은 대북 국교정상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북 강경자세가 온화한 자세로 쉽게 바뀌어 가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4자회담을 지지한다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본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창진: 한반도 주변 7개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모색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을 갖는 다자간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가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때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인접국가’와 ‘접경국가’와의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가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인접국가란 의미는 구소련이 포괄하고 있던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러시아 외무장관인 꼬지레프가 언급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접국가라는 개념도 러시아 외교정책과 함께 현실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순차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세에 따라 유동적인 상대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방향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정책과 관망의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러시아의 의도와 능력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개별적 관계 및 전체적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은 없겠지만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자회담의 의미와 위상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정전협정의 대체로 보자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4자회담이 앞으로 발전한다면 단순히 정전협정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초청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외세의 압력을 줄이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숫자가 작으면 그만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발언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회담의 주체나 참석자를 늘림으로써 그만큼 거기에 참석하는 국가의 입김이나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정부의 대러시아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해보이면 접근하고 약해 보이면 무시하는 매우 유아적이고 단선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및 회담에 임할 때 실무적 준비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인곤: 4자회담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이 상이한 바, 러시아

는 반대하고, 일본은 지지하며, 중국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각국의 국익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4자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수락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두번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의

사회: 김홍명(조선대 교수)

발표: 최영관(전남대 교수)

김국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손호철(서강대 교수)

임채완(전남대 교수)

임채완: 오늘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평화공존과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에만 집중되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미개선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이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정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했을 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결국 통일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문제가 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및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만 정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평화구축이나 통일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론화할 것이고 대국민 홍보를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영관 교수님은 정전협정인가 평화협정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논리상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대국민홍보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호철: 우리의 통일논의에서 '이중잣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즉,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이중잣대', 즉 우리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가 필요하고 아울러 북한도 이러한 입장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통일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주의,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통일논의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를 거론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실체가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가 가능한지, 결국 이러한 이중잣대를 어떻게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의 추진에서 극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 「선혁명, 후통일」론이 공식적으로는 기본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럴만한 체제능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인데 남한의 헌법규정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전한반도에서의 실현이라는, 실질적으로는 흡수통일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이 1민족, 2체제의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론이 지배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김국신 박사님은, 제네바협정 이후 북한의 소극적 입장 표명을 비판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소극적이어서 북한이 그런 입장을 표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남북한의 세칭 '강경파'는 통일드라이브에 있어 남북한 국민의 공동의 이해에 반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조직 이기주의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남북한 '정부'의 이익,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만들고 있는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국신 박사의 논의가 남북관계의 추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주의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자 및 내부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생각해볼 때 결코 남북관계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최영관: 평화협정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인데 그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은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현재 의도적으로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휴전협정 제5조 60항을 보면 휴전협정이란 전쟁의 중지고, 이런 중지인 휴전이 다른 상태로 가려면 반드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일괄 타결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жат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 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이중жат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북 쌀지원의 경우가 이를 잘 반증합니다.

당사자주의도 원론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 원칙만은 엄격히 세워놓고 그 토대 위에서 강온전략을 추구해야 옳은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그런 원칙이 없다면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통일의 달성에 이익이 되겠지만 그런 시기가 올때까지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악으로서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선혁명 후통일론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인식하는데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북한에게 접근하는데는 강온양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통일정책이 결국 흡수통일론이 아닌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남한이 흡수통일할 능력도 없지만,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이 현재 통일정책의 기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국신: 한반도 통일정책이 대미정책으로 일원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통일문제가 평화문제로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4자회담 제안 등 평화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며, 통일문제는 남북한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후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4자회담은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현

제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현상유지적, 분단고착화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분단체제의 안정을 통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4자회담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국민의 이익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는 과연 남북한 주민의 전체이익이라는 것이 현실정책의 추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정부의 일방적인 기득권적 정책추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홍보의 필요성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손호철 박사가 제기한 제네바 협정 이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와 관련, 과연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은 남북한간의 정직한 중재자가 되기 불가능하며 결국 한국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록> 회의일정

I. 등 록 09:30~10:00

II. 개회식 10:00~10:30

- 국민의례
- 개 회 사: 지병문(전남대 통일문제연구소장)
- 축 사: 노성만(전남대 총장)
- 기조연설: 이병용(민족통일연구원장)

III. 주제발표

▶ 제1회의 10:30~12:30 4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사 회: 박하일(전남대 교수)
- 발 표: Selig S. Harrison(카네기국제평화재단)
-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역할”
金景一(북경대 교수)
-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 토 론: 이삼성(한림대 교수)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찬 12:30~13:50

▶ 제2회의 14:00~16:00 4자회담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 사 회: 여인곤(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 발 표: Hajime Izumi(시즈오카대 교수)
-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김창진(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 토 론: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은봉(강원대 교수)

Coffee Break 16:00~16:10

▶ 제3회의 16:10~18:00 4자회담과 통일 전망

- 사 회: 김홍명(조선대 교수)
- 발 표: 최영관(전남대 교수)
 -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방안”김국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 토 론: 손호철(서강대 교수)
임채완(전남대 교수)

IV. 만찬 18:00~20:00 (노성만 총장 주최)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남북한 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전망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세미나시리즈 96-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